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Changes in North Korea and the Korea Policies of the
Four Major Pow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제5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5. 17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오늘날 우리의 외적환경은 周邊4國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남북한간 直接對話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가 平和的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만큼 改善되었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눈을 안으로 돌려 볼 때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대결과 불신,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정전협정의 무실화를 기도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변화를 誘導하여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에서의 平和定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周邊4國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민족통일연구원에서는 1996년 5월 17일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이라는 주제로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발표한 5편의 논문과 국내학자들의 토론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발간과정에서 토론내용의 일부는 재편집을 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6년 5월 17일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目 次

序 文

開 會 辭 李秉龍 ... 1

基 調 演 說 權五琦 ... 3

I. 第1會議 13

1. 동북아정세 변화와 미·한 안보협력 방안 William Clark, Jr. 15

2. 최근의 북한정세와 일·북관계 永井愼也 ... 32

3. 토 론 윤정석, 문정인, 박영규 ... 37

II. 第2會議 61

1.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Larry A. Niksch ... 63

2. 신동북아 질서하에서의 중·북관계 전망 宋寶賢 .. 82

3. 주변 4국과 남북한: 동아시아 안정의 시험대 .. 안병준 · 90

4. 토 론 유세희, 김유남, 전인영 ... 112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北韓情勢 變化와 周邊4國의 對韓半島政策」이라는 주제로 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國際學術會議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신 국내외 學者·專門家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90년대 들어와 世界는 엄청난 軸의 變化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에 걸쳐 세계를 지배하던 冷戰體制는 해체되었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상호의존적인 신세계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외적환경도 한반도 平和와 安定, 나아가 통일에 대해 直接的인 利害를 갖고 있는 周邊4國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남북한간 直接對話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가 平和的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만큼 改善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김정일체제가 公式 出帆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改革과 開放을 통한 근

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停戰協定の 무실화를 기도하면서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平和協定締結만을 고집하고 있는 등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대결과 불신,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변화를 誘導하여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에서의 平和定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周邊4國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저희 연구원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저명학자 및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근의 北韓情勢 및 東北亞情勢, 南北韓關係, 그리고 주변4국의 對韓半島政策을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有益한 學術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 秉 龍

基 調 演 說

權 五 琦

副總理兼 統一院 長官

학술회의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민족통일연구원이 개원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관한 깊은 경륜과 식견을 가진 여러분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1945년 알타에서 시작되어 전후의 반세기를 지배해 온 냉전체제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인간의 자유와 번영을 향한 공동목표 아래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 기류가 넘치고 있습니다.

분단국으로 남아있던 독일과 예멘은 이미 수 년전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최근까지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던 보스니아와 중동에서도 평화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창설됨으로써 지역안보에

관한 대화·협력의 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엔도 창설 반세기를 넘으며 보다 「효율적인 유엔」을 향한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세기 후반의 역사는 분명 커다란 진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시계추는 50년 동안 그 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 아직도 반세기에 걸친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부각되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동북아지역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내에서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의 안보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대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각국 정상들의 긴밀한 움직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역동성을 실감합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보경쟁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정세를 보다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권력승계를 준비해 온 김정일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최고권력자가 사망한지 2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가 메꾸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군령통치」에 의한 위기관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는 종래의 구호가 「군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로 대체되는 등 군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1990년 이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대외무역의 감소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식량부족은 주민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에너지난은 산업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의 수해는 북한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제난의 심화는 나아가 북한주민의 탈출과 함께 북한사회 내부의 일탈행위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남 적대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대내적인 통제와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서두르면서 나진·선봉지대 등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조심스럽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개방·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해결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북한의 어려움이 자칫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주변 4국의 일차적 관심은 북한의 질서있는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은 남북관계와의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의해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건설적 변화보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과 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 북한지도부와 긴밀한 인적 유대를 유지해 온 중국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또한 과감한 개혁과 폭넓은 개방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해 온 훌륭한 선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안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로서는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 환경의 안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러시아 또한 그동안 개혁·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도 북한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노력이야말로 동북아의 안정을 굳건히 하는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의 포성이 사라진지 올 해로 만 43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긴 기간동안 한반도에는 「차가운 평화」만이 지속되어 왔을 뿐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본격화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남과 북은 '92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가기로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93년 4월 중감위 체코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이래 정전체제를 와해시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당연한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대미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세차례의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무력시위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16일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발표를 통하여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4자회담」은 분단 반세기의 대결과 반목을 청산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려는 진지한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관련 당사자인 미·중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바탕한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우리는 「4자회담」 틀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안은 「열린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4자회담」의 의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열린 협의의 공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한·미 양 정상이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천명한 점은 의미심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의 안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과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북한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주체는 동족인 한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오면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반대로 「4자회담」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국제적 고립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나,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위해서도 북한은 「4자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4자회담」이 동북아지역 전체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역사의 모순은 결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4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 「4자회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당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분단된 민족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이념, 체제, 정치, 군사 ... 그 어떤 논리로도 원래 하나이었기에 당연히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민족의 열망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주인공은 바로 한민족,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홀로 이를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그러했고,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한반도 문제에는 주변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특히 주변 4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아래 통일을 추진해 나가
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세계사의 진전과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자유·인권·평화·번영·호혜·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의 통일을 우리는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통일논의의 세계화」입니다.

더욱이 우리 눈앞에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기에는 한반도의 위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지역은 더 이상 냉전의 대립과 갈등의 전초기지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또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북아의 한 가운데에서,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한민족의 통일은 북한지역이 시간적으로는 「21세기화」, 공간적으
로는 「세계화」 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인류와 세계에 공헌하는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의 목표이자 한민족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된 한반도보다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의 평화와 인
류의 번영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21세기 세계사를 더욱 빛나게 할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굳건한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오늘의 주제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가 북한정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데 매우 유의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면

第 1 會 議

빈 면

동북아정세 변화와 미·한 안보협력 방안

William Clark, Jr.
Japan Society 회장

오늘날 냉전시대를 향수를 가지고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돌이켜보면 냉전시대에는 적과 아군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소련의 위협이라는 변수 때문에 많은 지역적 이슈들이 묻혀 있었던 동북아에서 특히 더하다. 안보구조에 대해서는 주어진 것으로 당연시 되었고 경제문제에 대해서만 토론이 가능하던 시대였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변화하였다. 전세계, 특히 동북아는 다핵화되어 있으며, 적과 친구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 옛날에 묻혀 있던 이견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남쿠릴 열도에서부터 독도, 센카쿠수, 대만, Spratlys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태지역 각국들이 그들의 정책방향과 향후 아시아에 대한 전략을 고심하면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협력의 가능한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전에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동북아 지역 정세의 변화

조금 먼 지역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흐름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동남아국가들은 식민지시대의 영향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표현을 자제해 왔다.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태도와 관습을 떨쳐버리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이 지역은 부흥하는 분위기로 충만해 있다. 미국의 힘이나 크기에 의하여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미국이 인권문제나 경영기술에 대해 강의를 하고자 할 때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동시에 동남아국가들은 그들의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 지역 국가들의 무기구매 수준이 높은 것은 이 불확실성의 증거이다. 역내국가들은 상호간에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들은 일본의 再군국주의화 가능성에 대하여 자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이웃 대국에 대하여는 덜 우려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중국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상 동남아 국가들은 당분간 안보관계에 있어서 현상유지를 고수할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만문제와 같은 역외의 사건마저도 그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아국가들은 건설적인 참여화의 길을 지속할 것이다. 동시에 아세안 지역포럼(ARF)을 강화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실질적인 안보 그룹

화를 구성하기 보다는 이 지역포럼이 전반적으로 보다 건설적인 참여전략이 될 것이다. 공정하게 말해서 ARF의 형성은 전통적인 의미의 진정한 동맹 형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역내 국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룹화의 추진력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어떤 다른 국가도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정도의 투명성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은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더욱 강력한 안보협력을 가지는 소그룹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간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안보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희망은 오히려 미래의 오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미래 문제를 전망하기 위하여 대만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최근 반응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두대의 항공모함을 파견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국에 대하여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응이 그러했던 것은 향후 중국의 역할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향후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할 또 하나의 나라는 일본이다. 최근의 사건들은 향후 일본의 안보 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제기한다. 그 지역은 미·일 안보동맹의 구조에 적응해 왔다. 그것은 한·미 안보동맹과 함께 미국이 아시아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오늘날 미국과 일본에서 안보관계의 필요성과 대안적인 형태에 대한 토

론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일 안보동맹이 미국인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으며, 일본인들에게는 인기가 적었다.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미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더 우려하였다. 오늘날에는 역내가 표면상으로는 평온하지만 양국 국민들 인식에는 갭이 더 클 것이다.

이 논문은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 4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하던 시점에서 씌어졌다. 안보관계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윤곽이 분명해지고 있다. Futenma에 있는 해군비행장을 포함한 군기지는 반환될 것이다. 시설들은 옮겨질 것인데 아마 일본 밖으로 나갈 것이다. 군대는 일본내에서 재배치될 것이다. 미군의 주둔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병력숫자가 될 것이라는 점인데 약 10만명 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그 지역에 주게 될 인상에 관해 우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범위가 아무리 끔찍하다고 하더라도 세사람의 군인이 관련된 하나의 사건 때문에 군사시설이 포기될 수 있다면,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만약 군사시설이 이 사건때문에 미국으로 옮겨진다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처음부터 주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 일본에서 미군의 주둔이 종식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를 보면 혼란을 느낄 것이다. 야당은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기를 원한다. 집권당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일본의 입장에 대해 립서어비스를 하면서도 미국에 동의하며 유사시에 미군에 대한 지원액수를 증액한다.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일본

자위대를 활용하게 된 것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면 일본의 방위전략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방위전략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그러한 변화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후 한미 안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는 동북아에 관한 검토를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아시아에서는 러시아에 관해서는 논의가 없으며 러시아의 위협에 관해서도 논의가 없다. 붉은기 함대가 아직 블라디보스톡에 있으며 미사일 잠수함이 아직도 페트로파블로프스크의 잠수함 계류소를 드나들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다. 러시아 군대의 능력은 대체로 체첸에서 보듯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내부분제로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이 없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과 클리턴 대통령이 한국, 북한, 미국, 중국간의 4자회담에 러시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러시아의 요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당분간은 정지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국 안보관계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를 제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우려를 범하는 것은 실로 근시안적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한반도의 통일과 같이 이 지역의 세력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올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러시아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틀림없이 한반도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미 한국을 승인하였고 한국과의 경협을 증대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자기쪽으로 기울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러시아가 통일한국과는 짧지만 공동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시아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마지막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안보관계에 있어서 이 논문의 초점이 되는 앞의 두 나라와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중국을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국가로 본다든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본다. 중국은 지난 200여년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이전의 아시아 및 세계에서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은 아니지만 멀지 않아서 군사적으로 최강국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총생산의 측면에서 최고의 부국이 될 것이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최대의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여러 주변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중국은 아시아의 권력구조가 중국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북경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장기 계획에 착수했다.

미국과 한국이 미래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국이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우 단순화된 주장일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오랜 전통인 “中華(Middle Kingdom)”의 멘탈리티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나 남사군도와 같이 이미 의제에 올라 있는 것 외에 영토에 대한 야심은 없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은 1842년 아편전쟁을 전후한 상황과 유사점이 있다. 등소평에 의하여 지도되는 근대화·서구화파는 과거 질서의 이데올로그들에 의하여도 전받고 있다.

중화에 대한 존중을 갈망하며 현재의 권력구조에 불만을 품고 있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는 나라들에게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 통일 이후에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즉, 경제교류, 고위층의 상호방문 등은 모두 새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역내에서 중국은 분명히 일본을 가장 우려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전혀 놀랄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의 주요 문제의 하나인 대만문제의 원인 제공자이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우호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적이다. 한편으로는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지적하곤 한다. 후자의 입장은 한국도 동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최근에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하여 역내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미국은 아직 믿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의 최근 발언을 분석해 볼 때 이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인도 후자의 입장이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군을 현대화하면서 중국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부터 주도권을 도전받을 걱정은 덜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내에서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미국이다. 만약 중국이 “중화” 모델에 상용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기도한다면, 이 지역에서 미군의 철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

지금까지 살펴본 아태지역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은 너무 간단하여 수박 겉핥기식이었지만 지면관계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협력의 미래를 살펴보기 전에 최근 양국 관계를 간단히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미국은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경험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세대와 한국전쟁 세대는 물러나고 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선거를 통해 당선된 관리들은 국제문제에 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내문제에 전념할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냉전의 종식은 정치 방정식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변수를 제거해버렸으며,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설득력있는 구조를 제시하지 못했다. 보스니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둘러싼 토론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에 한치의 의심도 없다. 미국이 보스니아 문제에 참여하게 된 것도 1년이라는 시한을 정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보스니아 문제는 유럽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선거의 해에 대외정책의 공세가 선거에서 득표요인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 실제로 대외문제는 미국의 통제밖에 있기 때문에 대외문제에 정치적 중점을 두는 사람은 선거국면에

서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외문제가 특히 예산문제와 관련될 때는 미의회와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평화유지군 대신에 미군이 개입한 것은 이미 승인된 군사비에서 지출된 것이다. 오늘날 안보문제에 관한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외 문제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선거는 3金씨에게 마지막 무대였는지도 모른다. 거인들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면 새세대가 한국의 대외정책을 담당할 것이다. 그 정책은 한국전쟁 이래로 지배적이었던 방향과는 다를 것이다. 통일이 되면 냉전의 잔재는 없어질 것이며 한국의 대외정책은 전면 재편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것인데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는 설 땅이 없을 것이다.

향후 미국·한국 안보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가장 명백한 것은 동북아의 동맹구조는 냉전의 독특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미국·한국 관계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굳건히 형성된 것이며,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미국·한국 관계는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감소하였다. 최근 북한의 태도로 보아 이러한 주장에 다소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위협이 감소하였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과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충돌시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을 갖고 있었을 때는 현재에 비해서 무력도발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북한이 핵문제와 정전협정 와해시도로 세계의 주목을 끌 수 있으면서도, 식량원조를 위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몇년내에 북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로로 북한이 사라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전쟁이나 연착륙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구도 많은 북한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동북아안보에 급격한 변화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설하에서 나는 미국·한국안보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적인 환경하에서 참가국 어느 누구도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동북아안보체제의 형성은 가능할 것인가?

과거보다 더 강해진 통일한국이 21세기의 안보체제를 구상할 때, 무엇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의 안보관계이며, 특히 현재의 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선택일 것이다. 그런 선택은 미국의 입장에 상당부분 의존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이 어느 주변국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나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안보체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가상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보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전자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그러한 안보정책은 세계역사상 전례가 없는 독특한 것이다. 그 유명한 1815년의 비엔나 체제조차도 세력균형만을 보장해 주었을 뿐 99년 후 비참하게 붕괴되고 말았다.

한국으로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주변국 중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는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과 보다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자신의 안보에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중국은 한반도 주변의 변화 움직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미·일안보협력이 그 관심지역을 동아시아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장한다는 발표와 일본자위대의 증대된 역할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미·일안보협력을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임과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제어장치로서 환영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자위대의 역할증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우려하였으며, 중국의 이러한 견해는 남한과 북한에서만 제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과 역사적으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중국과 유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일본과 한국과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안보정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통일한국은 일본 대신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에 대한 한 예이다. 그러나 밀

(John Stewart Mill)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이 최대의 이익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오늘날 무엇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며, 과거 역사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가지 면에서 러시아를 가상 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현명할 것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의 주요 국가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자신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선택은 중대한 과오가 될 것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4자회담제외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의지는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통일 이후 한국은 한반도내의 외국군대 주둔에 대한 결정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대부분의 한국민에게 우호적인 관계로 기억되는 미국-한국 관계의 역사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보다 긴 역사에 바탕을 둘 것이며,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주변국가들의 인식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역내 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최근 변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구상을 더이상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 요소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 비록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을 중국이 모색하는 새로운 동북아 정치질서에 방해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아마도 통일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를 원치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전보다 강대해진 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희망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국력이 급신장하고 북한에 대하여 보다 비판적이 되며 북한의 국력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주한미군과 한국국민들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언젠가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한국의 민주정부는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정당화시키는 데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을 대체할 새로운 적이 있고 그 적이 한국과 국경을 접하는 국가라면, 한국의 방위에 관한 타당성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그런 가능성은 없고,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존재에 대한 유일한 이유는 지역안보일 것이다. 지역안보를 위한 미·일관계와 같은 개념을 한국민에게 소개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더이상 유용하지 않게 된 후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한국에 국한해서 언급하는 변화는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북아 안보체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일본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은 더 강력해진 새로운 이웃을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는 일본이 현재의 한반도 분단상황이 유지되기를 가장 바라는 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이 일본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한반도의 통일은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믿음을 갖으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진정한 우의관계를 수립하는 데 실패하였다. 일본은 통일한국이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할 것이다.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

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통일한국이 이들 나라에 기운다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일본을 정책적 곤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내의 분위기에 의해 더욱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 즉 한반도에서 위협의 감소로 주한미지상군이 더이상 필요없게 된다면, 워싱턴에서는 아시아에서 모든 미국지상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군이나 공군은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장기적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한국 안보정책의 향방

나는 한·미·일 3국이 불가피하게 닥칠 한반도 통일 이후 급격히 변화될 안보환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본 논문을 매우 논란이 되게 서술하였다. 역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아시아 국가들에 확신시키려는 현재의 노력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러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일본주둔 미군기지의 감축은 25년만에 처음있는 일로서 올바른 일이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아쉬운 점은 보다 큰 맥락에서 변화를 추진하려는 시도이다. 미·일관계에서 바로 이 큰 맥락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미국-한국 관계에서 큰 맥락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향후

20년간 아시아의 미군은 10만명선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현재 채택되고 있는 단기적인 조치들은 큰 맥락에서의 변화를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향후 20년간 미국·한국 양국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안보체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곧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한국 양국이 역내 혹은 전세계에서 하나의 적을 상정하고 가상 충돌을 대비하여 현재와 같이 방어태세를 지속시키는 것과 역내 국가들간에 상호 의심과 두려움이 없도록 투명성을 보장하는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이 두가지 시나리오는 분명히 각기 다른 대응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를 추진하면서 전자에 대한 준비를 포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한국 양국의 국민들이 그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되풀이하는 현재의 태도는 동맹을 보호하고 지속시키려는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동맹을 파괴하는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한국 양국의 군지휘관이 현재의 병력수준이 고정되어야만 한다는 명령을 듣는다면, 그들은 변화된 환경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정치현실 뿐만 아니라 기술에서의 변화일 수도 있다. 병력이 고정되어야 한다면 새롭고 향상된 기술을 개발하려는 흥미가 감소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한국 양국의 국민들이 역내에 변화하는 환경과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를 깨닫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쉬운 일은 아니며 특히 변화속에서 변화를 이루려는 정부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외부환경이 바뀔 때, 관료적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과거의 관행을 지키려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고정된 정책하에서 서서히 전개된 긴장과 갈등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태를 종종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한국 방위와 안보정책의 향방은 미래의 현실을 고려하여 과거의 정책근간을 수정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에 기초하여야 한다.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시아를 규정하고 있는 역학관계를 무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인정하고 이 변화가 관련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정부의 해체를 가정한 것이며, 북한정부의 해체가말로 지난 50년간 가장 극적인 사건일 것이다. 북한정부의 해체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제 한국 국민과 지도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게 된 것이다. 또한 주변 관련국은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적대관계의 긴장이 없는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논문을 맺기 위해, 최근 미국·한국 양국에 의해 제시된 4자회담의 긍정적 전개를 가정해 보자. 4개국이 한자리에 앉아서 한반도의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가져올 방법을 어느 당사국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나는 일본과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는 지속적인 평화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믿는다. 일본과 러시아가 포함될 수 있다면 토론은 계속될 수 있고 범위를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까지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ARF에 포함될 수도 있고 더 넓은 범위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바람직한 것이다.

최근의 북한정세와 일·북관계

永井愼也

日本國際問題研究所 所長代行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후 2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70년 이후부터 후계자로 육성되어 온 김정일 당서기는 아직 부친의 지위 즉 당총서기 및 국가주석에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의 사정은 만성화된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작년 여름에 대규모의 수해피해를 입었고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

본인은 이와 같은 북한정세에 관하여 현지시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 정치적으로는 일단 안정

(1) 김일성 사후, 군대경력이 없는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일시적이거나 있었다. 그와 같은 의견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장례 직후나 100일후에 당·국가의 최고

지위에 취임하지 못함에 따라 한층 강화되었다. 하지만 김일성 사후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북한의 내외정책을 보면, 북한지도부 내부에 권력투쟁의 움직임이 발견하기 어렵다.

김정일의 취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김정일은 그의 부친 김일성처럼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카리스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김일성이 가진 카리스마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즉 김정일은 그의 부친에 대한 효행심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나아가 빨치산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들에게는 경애심을 나타내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취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일성의 3년상에 해당하는 금년 7월 8일 이후는 지금까지 이용해온 유교의 효(3년상)의 개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북한지도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2)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이 일단 권력을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김정일이 강력하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95년 2월 사망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후임을 포함한 일련의 인사를 보면 연공서열을 중시한 인사의 색채가 강하였고, 또 김일성 사후, 95년, 96년도 국가예산은 작성조차 되지 않았다. 즉 김정일로서는 김일성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서서히 확립할 수밖에 없고, 더우기 경제의 만성적 악화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2. 경제문제는 심각

(1) 내가 이번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 관계자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또 북한체제 기간중 정전을 몇번이나 경험했는데, 정전을 일상 다반사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국가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듯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는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이다. 이 점에서는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여러가지 推計로부터 보면 북한의 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는 원유환산 100수십만톤이다. 따라서 KEDO가 연간 50만톤의 원유를 제공한다는 것은 북한경제에 있어서 지극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2) 식량문제에 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70년대 이후의 “주체농법” 때문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 결과 최소한의 곡물필요량은 6~700만톤인데, 국내생산분은 4~500만톤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이 부족분을 수입 혹은 원조로 메꾸어 왔다. 그런데 북한의 최대식량수입처인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종래의 우호적인 가격이나 바터제 방식의 흥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식량사정은 한층 어려운 사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년 여름의 豪雨 및 수해가 북한을 휩쓸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수 520만명, 피해총액 150억달러”이다. 이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입은 피해가 막대한 것은 사실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붙어 전개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원조를 호소한 것이 주목된다.

(3) 북한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경제상황의 심각화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아울러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하나가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역” 구상이다.

나는 이번 평양체제 기간중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역” 구상에 종사하는 북한측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열의가 대단함을 확연하게 느꼈고 또 외자도입을 위한 법제정비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북한측의 경제관계자들은 서서히 개혁·개방을 해 나가는 것이 경제재건의 열쇠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개혁·개방에 따른 변화는 현재의 김정일체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상호모순되는 정책목표(즉 체제유지 및 경제재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주목된다.

3. 금후의 북일관계

(1) 일본과 북한간에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8차례에 걸친 국교정상화교섭이 이루어졌지만, 북한이 교섭을 중단하였고 그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정당차원에서는 1995년 3월 와타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 전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여 3당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하였고, 무조건

적으로 국교정상화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 차원에서 합의했다. 또 1995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유상·무상 총 50만톤의 쌀을 제공하였다.

전반적 상황은 이상과 같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북한이 여러 차원에서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2)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과 북한간에도 베르린에서의 미사일협상,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 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 이와 같은 북·일, 북·미간의 움직임 그 자체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최근의 휴전협정 形骸化를 위한 움직임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 일본과 미국에 접근하는 배경에는 한국을 소외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한·미·일은 KEDO를 둘러싼 협력관계에서 보여 주었던 긴밀한 관계를 앞으로 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1회의 토론

사회자: 이상우 (서강대 교수)
토론자: 윤정석 (중앙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박영규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

이상우: 고맙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중요한 점들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순서대로 세 분의 지명토론자에게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정석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윤정석: 두 분께서 여러가지 좋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들어보고 싶고 궁금한 점을 여기에서 이야기 하였으면 합니다.

우선 클라크 대사님께서서는 이 지역에서 안보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2+2」가 앞으로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가는 구조의 원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미국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회

답이나 남북관계를 보고 있는 것인지를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국이 일본을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협력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중국이 일본의 무장수준을 변변치 않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무장수준이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거의 일본과 비교하거나 하나의 국가로서 일본이 이 지역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무장수준으로 볼 때 일본군사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미국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gai 선생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얼마전 북한에 다녀온 경험을 말씀하실 때에 주로 북한의 어려운 사정과 KEDO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로만 연구소가 평양에 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실제로 무슨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과 북한간의 기본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답사같이도 생각되었습니다. 논문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왜 북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셨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어서 실망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쪽에서 자꾸 경제문제만 토론을 해서 그 문제가 진전이 안되었던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2」 회담에 일본이 끼어 있지 않은데 일본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휴전협정 때문인지 아니면 한반도의 장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일본의 군사력이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학자로서 한국이 일본과 어느 정도 안보상의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한계를 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명성있는 연구소의 소장님으로서 일본 외무성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나가이 선생께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일본정부내에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외무성, 관방장관실, 방위청간에 북한이 붕괴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오늘 제가 회의에 오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파리에서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환경 문제, 공공전염병 문제에 관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본에서도 사람을 파견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두분께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상 북한이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자꾸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와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국제협약을 계속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서 두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분들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므로 세분 지명토론자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종합해서 두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정인 교수

님께 부탁드립니다.

문정인: 우선 클라크 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클라크 대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외교관 같지 않은 글입니다. 왜 외교관 같지 않느냐 하면 상당히 영어의 어투가 도전적(provocative)이고 상당히 적나라하게 21세기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클라크 대사님은 외교관과 NSC에 계실 때에는 상당히 신중한 분이었는데 외교관을 그만두고 나니까 상당히 도전적(provocative)으로 변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두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클라크 대사님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미래를 보고 계신데, 21세기 동북아 안보체제의 모습은 마치 19세기 말이 재현되는 그런 악몽과 같은 인상을 저희들에게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만 두가지 이유에서 반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동북아국가들끼리 상호의존이 증대되고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확산되는 시점에서 꼭 안보상의 딜레마가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democracy peace theory에 의하면 민주주의국가들끼리는 싸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북아의 상황이 앞으로 어려워지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중국이 앞으로 계속 공산당 지배의 권위주의정권 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중국이 민주화 가능성이 있다면 민주화될 것이고 한국은 이미 민주화되

고 있으며, 그리고 클라크 대사님의 주장대로 북한이 붕괴되어 통일된 한국이 민주적이 되고 일본이 이미 민주적인 상황에서, 동북아의 미래를 클라크 대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대, 민주화의 전반적인 경향이 동북아의 안보체제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오늘 클라크 대사님이 제기하신 가장 큰 문제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동의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지역의 전략적 불안정성이라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불안정성만을 가지고 한·미 동맹관계, 미·일 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클라크 대사님은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학생들과 이야기 해 보면 동북아가 19세기 말과 유사한 상황이 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미국은 소위 덜 나쁜 악마(less devil)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 당하느니 미국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일 후에 한국이 중간세력국가가 되었을 경우에 일본과 중국의 견제나 위협은 증가될 것이므로, 이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미국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의 안정세력으로 존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한국에서 서서히 일고 있는데, 클라크 대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번째, 클라크 대사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은 곧 붕괴되고 통일이 곧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시작은 통일된 한국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클라크 대사님의 생각과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사이에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우선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여 관계개선을 하면서 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기본틀을 잡은 다음 그 안에서 4자회담을 진행하면서 끝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체제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유지해줌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나쁜말로 하면 한반도 분단체제의 영속화, 좋은 말로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영속화가 클린턴 행정부의 기본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지속된다면 클라크 대사님이 생각하시는 북한의 붕괴와 그에 따르는 한반도 통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크 대사님의 기본가정과 클린턴 행정부의 현행 정책간에 어떤 모순 구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한 클라크 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클라크 대사님은 미국이 물러가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기대려 할 것이고 중국도 통일된 한국과 가까워지려고 할 것이며 지정적학적으로도 한국이 중국에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통

일한국이 갈 수 있는 길은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국에 접근하여 대륙세력권의 하나로 남는 것이고, 둘째, 일본에 접근하여 해양세력권의 하나로 남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중간세력국가로 성장하면서 미국과의 공조체제하에서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3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 중에 우리 한반도의 미래,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gai 선생의 글은 북한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윤정석 교수의 코멘트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상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gai 선생은 외교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외교관 처럼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윤정석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이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일본에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의 시나리오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윤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 부처간의 시나리오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떠한가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망한다고 한다면 일본이 북한과 수교교섭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의 대북한, 대한반도정책은 북한의 체제변동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전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나gai 선생의 시각은 어떠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본의 대북정책을 지켜보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일본이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정책방향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인데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본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사회는 민주사회로 다원주의 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본내에 조총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향을 가진 집단들이 혼재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쭙고 싶은 것은 일본내 소위 친북세력들의 정치적 힘이 얼마나 크고 이러한 점들이 향후 동경과 평양이 관계개선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그러면 박영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박영규: 먼저 클라크 대사님께 간단하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크 대사님께서서는 금번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은 미·일 안보협력을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임과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제어장치로서 환영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와같이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번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하여 일본은 아·태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가능성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역내 주변국가들이 영향력 확대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현재 해군, 공군의 대규모 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비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소위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를 천명함으로써 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양국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신예전폭기인 수호이 27의 생산, 판매 등 약 52억 달러에 달하는 구체적인 군사협력을 타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동북아 안보환경은 한편으로는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신안보체제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동북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좀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이 한국정부의 통제 아래 작전한다면 누가 부인하려 해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는 한국이라는 논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마저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클라크 대사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한·미 안보협력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나가이 소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북한정세에 대한 분석과 한·미·일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앞으로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클라크 대사님께서서는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반면, 나가이 선생님께서는 현재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안정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이 선생님의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일·북, 미·북의 접촉증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저는 북한의 정책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이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일·북, 미·북 접촉증대가 어떤 면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가이 소장님의 논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한반도 유사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군사적

인 측면에서 일본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일미군의 한반도 투입이 요구될 경우에 일본 국내법상 혹은 미·일협정상 어떠한 제약요인은 없는 것인지 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주일미군의 한반도 투입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세 분 토론자께서 아주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우선 이 단계에서, 발표하신 두분께 지금까지 나온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고 나서 일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클라크 선생님께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클라크: 먼저 토론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교수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결론은 평화협상체제를 이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안보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체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무력충돌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외에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최근 2년 정도 평양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4가

지 중요한 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핵문제입니다.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 저는 클린턴 행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인으로서 제 사건과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처음에 북한과 단독대화를 시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부를 떠나기 전까지도 다자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40억 달러에 달하는 경수로를 지원하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0만톤의 기름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회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베트남 문제는 미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매우 분열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은 미군유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유해조사비로 2백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DMZ에서의 북한의 행동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DMZ 사건 이후 제주도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제의하였지만, 사실 이전부터 4자회담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차관보였

던 지난 88년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 4가지 조치를 약속한 온건한 정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교역을 허용해 주고 미국언론인, 학자, 목사들의 북한방문비자 발급을 용이하게 해주고,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바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들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건정책은 실효를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모든 것을 보장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조금 주고 거기에 대해 북한이 반응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니까 북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북한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체제를 확립한다 해도 북한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협력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군사력 수준 때문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이 작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본도 현대 군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력을 갖지 못했고 그리고 헌법에도 군국주의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적수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협력관계라기 보다는 일본의 군사력에 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이: 일본이 4자회담 당사자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내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4자회담이 아주 유용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은 언제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방문중에 북한의 경제난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제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 정권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부정치면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언제 붕괴할 것이라고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과 북한이 언제 국교정상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교정상화가 북한에 여러 이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원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한반도 분단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반도 통일과 일본-북한의 관계개선과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말씀드

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이 한국민 자신들의 문제이고 따라서 한국민들에 의해서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며,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은 도움을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북한이야말로 현재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수립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북한이야말로 일본이 관계정상화를 이루어야 할 마지막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독일통일 이전에 동서독과 국교정상화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동독과의 관계정상화는 일본이 통일된 독일과 관계정상화를 이룩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았고 어려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부터의 일본정책의 독립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상호의존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의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은 때때로 상호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고립(*autarky*)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의존의 세계에 살고있는 만큼 가능한한 세계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미국정책 방향 및 사고방식과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고 미국과의 상호 조정·협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정책 특히 대북정책 같은 경우는 한국정부와의 상호 조정·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정책의 자주성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개방은 필

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김정일정권은 큰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개방이 되면 현 김정일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현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현재 상태에서 더 개선이 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사회 또는 국제경제체제에 대한 개방을 통해서 북한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공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좋은 결과를 낳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차대전후 일본에서는 항상 평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 국민은 따라서 어떠한 현 상태의 구조적 변화라든지 평화를 해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현 헌법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 공헌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가까운 장래에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파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사회자: 이제 일반참석자들이 질문과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자들에게 더 해명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윤정석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윤정석: 특별히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만, 나가이 선생님이 쓴

글 속에 요즈음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정치적으로 균형이 잡혀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논문 후반부에는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효도기간인 3년상이 끝나는 7월 8일이 지나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서양사람들은 보통 한국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자면 유교적인 사상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관점에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가이 선생이 실제로 관찰하기에 3년상이 지나면 유교적인 통제가 풀어져서 김정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논문의 다른 부분에 김정일이 분명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힘과 권력(force and power)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문정인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문정인: 클라크 대사님께 제가 빠뜨린 질문이 있었는데요, 클라크 대사님의 글을 읽으면 4자회담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자회담에 일본과 러시아를 빼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클라크 대사님께서 짐 베이커 장관 시절 「4+2」형식의 모델을 만들 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자회담

의 가능성에 대한 클라크 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박영규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영규: 두 분 모두 저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클라크 대사님께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군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질문드렸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완전환수 그 자체에 대해서 클라크 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생님께서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투입이 필요할 경우에 일본국내법상이라든가 또는 미·일협정상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는지 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주일미군의 한반도 투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제시된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일반토론 후에 두분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가해 주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순승: 6년동안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있으면서 늘 주장했던 것이 「2+2」는 좋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클라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2+2」로 시작하여 「2」를 추가하

여 「2+2+2」로 했어야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인데, 이번에 「2+2」로 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습니까? 송보현 부소장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송보현: 나는 오늘 오후에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는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곽태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곽태환: 두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4자회담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발표하신 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4자회담이 열릴 경우의 의제문제인데, 북·미평화협정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클라크 대사님이 발표하신 한·미 안보협력의 방향에 앞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논의가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미국에서 EASI 3단계가 무효화되어 버렸지만 앞으로 그것이 실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혹시 강영규대사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강영규: 두분 발표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지정토론자들께서 의문이 나는 점이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해서 평화체제의 구축과 그후에 올 한반도 통일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 미국측 시각과 일본측 시각을 각각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으므로 질문에 대해서 두분 발표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클라크 대사님께서서 답변해 주시죠.

클라크: 먼저 4자회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하느니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4자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잘못 제안되었습니다. 평화협정은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은 미국 자체로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유엔군의 일부로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4자회담에서 배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해서 북한이 한국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러한 주장

이 지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담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전제조건을 달지말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보며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담은 열려야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회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자회담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4자회담에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4자회담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외교적 수완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에게 상황을 통보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미·북관계에 있어서 평화협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평화협정은 남북간의 문제이고, 평화협정이 성사되면 미국은 북한을 승인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단,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한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관계정상화 과정도 그 뒤를 따를 것이고 이는 한국의 통일을 지연시키기 보다는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전통제권에 관한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이 미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미간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은 앞으로 한국으로 통제권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랜 시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

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이: 3년상과 유교상의 효심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무언가 선심을 베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량난 해결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의 개선 없이는 김정일은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김정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3년상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논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문하신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북한주민들에게 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지도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일본의 군사문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일본의 우방국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환영합니다. 한반도에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주일미군의 파견에 대하여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개별적 자위

권'(individual right of defense)의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 개별적 자위권이 위협받는 한, 일본은 주일미군의 파견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평화체제와 통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진정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국민들이 이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할 줄 압니다. 한반도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본 역시 한반도 통일 특히 점진적 평화통일에 대해서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문제와 통일과의 관련가능성은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오늘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클라크 대사님과 나가이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명토론자 세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 면

第 2 會 議

빈 면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¹⁾

Larry A. Niksch

CRS 연구원

1995년 12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에 관해 협상을 시작한 이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다. 클린턴 미행정부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문제를 다루게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요약해 볼 때, 외부적 요인과 주위의 사건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행정부의 인식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세계적인(비한국적) 이슈에 대한 미국의 강조

1993년 집권한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적극적인 입장과 소극적인 입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입장에 서는 인사들은 근본적으로 그 영향력과 위협성에 있어 한반도의 범주

1) 이 논문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것이며, 미의회 조사국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를 벗어나는 이슈들에 관한 한, 대북한 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추구해 왔다. 이 이슈들이란 바로 핵확산에 관한 것들이다. 미행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이니셔티브를 취하였다. 핵확산 방지는 1994년 10월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를 확고히 하는 미국의 기본 목표가 되어 왔다. 그 주요 내용은 북한이 추진 중인 두 개의 대규모 핵원자로의 건설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 대사는 이들 원자로가 수 십개의 원자폭탄을 생산하여 과격한 국가들에 수출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미·북간 새로운 미사일 회담도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방지하려는 비확산정책의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윈스턴 로드(Winston Lord) 미국 무성 차관보는 그 목적이 “평양당국에 미사일 확산이나 테러리즘과 같은 분야에서 국제규범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표현하였다. 1995년 12월 까지 미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였던 스탠리 로쓰(Stanley Roth)는 미·북간 미사일 회담의 목적이 “미사일 판매를 토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²⁾ 더욱이 미행정부는 북한의 차세대 미사일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영토, 특히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미정보 보고서에 자극받은 것처럼 보인다.

2) 1996년 3월 19일 미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청문회에서 로드(Winston Lord) 국무성 차관보가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스탠리 오웬 로쓰의 “당황케 하는 북한의 도발,” 1996. 4. 14. 「워싱턴 포스트」, C2 참조.

미행정부는 남한의 안보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에 관해서는 관심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몇 개의 핵무기와 - 한 두 개의 북한 핵폭탄도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 남한의 어느 곳이라도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배치시켜 놓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행정부는 북한이 이미 알려진 핵시설 개발을 동결시키는 한, 제네바합의를 존중하려는 자세이다. 미 행정부의 입장에서 제네바 합의가 지체된다 해도 서서히나마 이행되는 것은 - 이미 공급계약보다 8개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연료봉의 제거와 IAEA에 의한 특별사찰에 관해서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 이행이 늦어지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³⁾ 특별사찰은 과연 북한이 소수나마 핵무기 소유를 가능케 하는 등급의 플루토늄을 획득하였는지의 문제를 확인하게 할 것이다.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

1996년 4월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불법 침입할 때까지,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비핵 이슈 또는 남북관계에 관한 한,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한반도 정

3) 좀더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는 필자의 줄고, 「기본합의문: 워싱턴의 견해(The Agreed Framework: View from Washington),」 「한미동맹 국제워크숍」 발표 논문(1995. 10. 5~7) 참조.

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고 한국을 우회하여 북·미간 쌍무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려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서 나타나 있다. 1984년 4월 이래 미행정부는 북한의 다음과 같은 행동, 곧 스스로 정전위원회로부터 철수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동 위원회로부터 철수케 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폴란드 멤버를 북한 영역으로부터 축출하고, 판문점내 공동경비구역 중 북측 지역을 중립국 감독위원회나 유엔군대표가 접근할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폐쇄조치하는 데 대해 어떠한 외교적 조치나 제재도 취한 바 없다. 미행정부는 워싱턴과 평양이 쌍무평화협정을 만들어 정전협정에 대체토록 하지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반대해 왔으나, 미국의 기본전략은 북한의 도전을 흡수(absorb)하면서 대응조치를 회피하는 것이었다.

좀더 논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전체제를 우회하여 남한을 배제한 채 미·북 장성간 군사회담을 개최하지는 북한의 제의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미간의 심각한 정책 차이에 대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관리들은 적어도 1995년 9월 이후, 미·북간 장성회담 개최에 대해 한국이 동의하도록 미행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 관리들은 그 요청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편지를 인용했는데, 하나는 주한미군 사령관 게리 럭(Gary Luck)장군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부 차관인 커트 캠벨(Curt Campbell)로부터 온 것이었다.⁴⁾ 미관리들, 특

4) 김민석과 김두우, “미·북회담을 승인토록 한국에 압력, 불화요인,” 『중앙일보』, 1996. 3. 29. 1면 참조. 여기에는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남한 관리들로부터 직접 인용된 몇몇 진술

히 로드 국무성 차관보 같은 사람은 이에 대해 한국정부와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들의 진술은 상세한 내용이 없고 평양측의 제의에 대한 실제 미국의 반응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⁵⁾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 심각한 이견노출에 관한 보고가 아마도 북한의 비무장지대 침입 결정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 평양측은 그들의 행동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이도록 하여, 서울과 워싱턴간의 틈을 더욱 벌이도록 하는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소극성은 또한 북한이 1996년 4월 4일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정전협정 의무포기를 선언한 데 대한 미국의 최초의 대응에서 잘 드러난다. 미행정부의 기관들은 북한의 의무포기 선언과 그 직후 결행된 판문점 비무장지대내 무장군대의 침투가 갖는 심각성을 평가절하하는 데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 백악관과 국무성, 그리고 국방성 관리들은 “특별히 놀랄만한 이유가 없으며”, “우리는 이것이 깊이 우려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을 표명하였다.⁶⁾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고참 국방성 관리들”과 기타 관리들은 3일밤 동안의 무장 침투 이후, 4일째에는 침투가 없었던 것을 “좋은 소식”으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 케넬 베이컨(Kenneth Bacon)은 “우리는 북한의 이

이 포함되어 있다.

- 5) 예를 들면, 1996년 3월 19일 열린 미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서의 로드 차관보의 진술.
- 6) 케빈 설리반(Kevin Sullivan), “북한의 3번째 비무장지대 침입(N. Koreans Enter DMZ a 3rd Time,” 「워싱턴 포스트」, 1996. 4. 8. A1를 참조하고,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취해진 조치들에 대하여 말하다,” 「워싱턴 타임즈」, 1996. 4. 5. A13를 참조할 것.

러한 조치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언하였다.⁷⁾ 국무성의 한 관리는 북한의 행동을 歌舞伎(kabuki는 일본의 전통극: 역자주)와 같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북한의 의도를 평가절하하려는 일관된 움직임은 이렇듯 명백하다. 유일한 예외는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가 표명한, 북한지도부가 악화되어가는 경제에 대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였다.⁸⁾

클린턴·김영삼 대통령의 4자회담 제의는 미행정부의 입장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이는 정전협정에 대신하여, 남한을 배제한 채 미·북간 쌍무평화협정회담을 열 것을 요구해 온 북한의 노력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취한 최초의 외교적 대응임을 말해 준다. 4자회담 제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결속을 시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의의 이니셔티브와 실질적 내용들은 남한에 의해 취해진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1995년 8월에 “2 + 2” 형식을 제안할 것을 검토한 바 있었고, 이번 제의는 그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제안에 대한 중국의 명백한 적극적 대응자세는 - 비록 그것이 비공식으로 표명된 것이긴 하나 - 이 제의에 관한 한 클린턴 행정부에 맞먹는 영향력을 중국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문제는 어떻게 미국이 정전협정의 문제와 남북간 군사적 이슈들을 다

7) 스티븐 에어랑거(Steven Erlanger), “비무장내 북한행동의 동기에 대해 당황하는 미국(U.S. Puzzling Over Motives of North Korea in the DMZ),” 『뉴욕 타임즈』, 1996. 4. 9: A1.

8) 위의 글.

루어 나갈 것인가에 모아진다.

북한의 식량부족에 대한 대응

1995년 9월 국제식량원조를 위한 북한의 호소는 한반도 문제를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 의제로 부상시켰다. 미행정부는 유엔 식량 원조에 2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정도의 작은 이니셔티브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행정부 관리가 좀더 실질적인 이니셔티브, 곧 장차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보다 대규모 식량원조 프로그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스탠리 로스는 1996년 3월 19일 의회 증언에서 “만약 기금이 임박했다면, 북한에 상당한 양의 식량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보다 앞서, 로드 국무성 차관보는 “북한의 구조적 경제난을 해결토록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우방과 아직 논의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⁹⁾ 미관리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보다 큰 규모의 식량원조 계획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넣었음을 인정하였다.¹⁰⁾

행정부 관리들은 식량원조 계획의 규모에 대해 이제 명확히 밝

9) 구쓰 콘스탄틴(Gus Constantine), “미국, 북한의 연료거래에 자금을 지원토록 일본에 요청(U.S. Asks Japan for Assistance in Funding N. Korea Fuel Deal,” 『워싱턴 타임즈』, 1996. 2. 7: A15.

10) 스티브 글레인(Steve Glain)과 조남주, “평양에 원조를 증대하려는 미국의 결정은 서울의 희망과 멀어짐을 의미,” 『주간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1996. 2. 12: 7.

혀 주어야 한다. 로스는 그러한 계획이 “북한경제를 구해내기 위한 최소의 마샬플랜”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식량부족에 실질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수십만톤의 식량원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유엔 관리들은 북한이 약 1백만톤의 외국 식량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식량원조 계획이 대체로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미행정부가 믿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로드 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식량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국제기구가 운영되는 이익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¹¹⁾ 한편, 이와는 별도로 행정부관리들은 북한이 충족시켜야 하는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남북대화를 진척시킴에 있어서 미행정부의 실적은 양면적이다. 먼저, 남북대화에 대한 수사적(rhetoric) 지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미행정부가 남북대화를 위해 실제로 거의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미 양국의 비판자들이 비난하는 것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미행정부는 KEDO에서의 한국의 역할 모두를 확보하였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KEDO내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또는 심지어 KEDO와의 대화도 거부하던 자세를 철회토록 한

11) 1996. 3. 19. 미하원 아태소위에서의 로드 국무성 차관보 증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관리들이 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국무성 부차관보에게 남한의 장기 북역 공산주의자를 북한에 “송환”토록 압력을 가하던 당시, 미관리들은 북한이 남한과 협상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기회를 놓쳤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식량원조를 지지하는 미행정부의 입장은 남한(워싱턴과 동경도 마찬가지)의 실질적인 협상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을 금년 4월에 한미 양국이 공동 제안한 것은 한국과의 강력한 유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의 미·북간 장성회담 제의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논의가 분분하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소극적 입장의 근원

한국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이지 못한 미국 정책의 배후를 보면, 클린턴 행정부와 국무성 내에 다양한 입장, 명분, 가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기본적인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engagement)”정책 배후에 존재하는 철학이다. 미행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정책을 포용정책이라고 표현해 왔다. 一見하면, 포용정책은 타국 정부와의 협상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과 동일시 될지 모른다. 미행 정부는 포용정책에 대한 대안은 봉쇄나 고립뿐이라고 종종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용정책은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포용정책

은 타정부와의 접촉, 회합의 과정을 의미하며, 때때로 최소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확대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포용의 목적은 타정부들에게 미국의 선의(good will)를 확고히 보여주고, 미국이 부정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불식시키며,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 미국의 포용정책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슈들에 대해 거칠고 상세한 협상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다(그러한 이슈들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미국으로부터의 혜택을 원하는 타국가들이 상응하는 정책변화를 먼저 취해야 할 지 모른다). 미·중관계에서 볼 때, 미행정부는 대만과 남지나해, 그리고 중국의 대버어마 지원 같은 이슈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회피해 왔다. 이들 이슈들이 표면에 부상했을 때, 미관리들은 중국에게 미국은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에 대항하는 입장에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곤 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도, 미행정부는 정전협정, 남북관계, 그리고 현재의 북한식량 문제 등 주요 한반도 문제들을 다루기를 회피해 왔다. 오직 그 이슈들이 전면에서 부상하거나, 국제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때, 포용정책은 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핵확산 금지 이슈는 바로 이 범주에 속하며, 미국의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은 이미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문제에서 입증된 바와 같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포용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미국무성내에 뿌리깊이 스며있는 태도, 곧 제재와 같은 압력수단의 사용

은 포용이나 협상전략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협상전략에 압력수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외교 행위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외교의 전술로서 압력과 위협의 사용을 강조하는 북한의 협상전략과 정반대되는 태도이다. 그 결과는 핵문제와 정전협정 문제에서 북한의 도발을 다루는 데 있어 항상 최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에 대한 미행정부의 인식이 미국의 적극적이지 못한 포용정책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때때로 행정부와 국무성의 관리들이 진정 이러한 견해들을 모두 신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네바협정의 애매모호성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일부 결함들을 지적하는 비판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특별히 이러한 점은 한편으로 미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신뢰구축” 명분과,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체제가 붕괴에 직면해 있으며 북한지도부가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는 견해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1994년 중엽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시작한 이래, 갈루치 대사는 미국이 핵협상을 통해 북한에 혜택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구축”을 형성하여 중국에는 북한을 “국제가족으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후에 갈루치는 제네바 합의의 경제적 조항들이 “북한체제를 개방시킬 것이며, 전체주의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은 북한이 고립된 채 남아있는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¹²⁾ 몇몇 국무성 관리들은 북한

12) 제프리 스미스, “미관리들, 북한과의 대화에서 단계적 미전략 예견,” 『워싱턴 포스트』, 1994. 6. 30: A13. 그리고 1995. 2. 23. 갈루치 대사의

정부가 “중국식” 경제개혁을 이미 시작했거나 멀지 않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점점 더 주요 경제개혁을 개시하기를 기다리는 “이론적 개혁가”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와 가정들이 미행정부의 포용에 입각한 대외정책 접근방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과의 대결이나 압력수단의 사용은 신뢰구축과 개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리고 모순되는 견해가 부상하였다. 그것은 곧 평양체제가 1988년이나 1989년에 동유럽의 공산체제가 몰락했던 것과 같이 붕괴를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제네바 합의 직후, 필자는 행정부 고위관리에게 북한핵의 특별사찰과 핵연료봉의 제거 문제를 다룬 제네바합의에 애매모호함이 있음을 제기한 바 있었다. 놀랍게도 그 관리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우리는 당신이 염려하는 것을 잘 이해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북한은 어쨌든 붕괴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컬럼니스트인 짐 호그랜드(Jim Hoagland)씨는 1995년 8월에 “클린턴의 외교정책 참모들은 고립되고 결핍된 북한체제가 미·북간 약속된 원자로 건설 이전에 붕괴하여, 미국의 건설 약속 책임을 면해주게 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¹³⁾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1996년초에 붕괴이론은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였다. “붕괴 열광”은 북한에 대한 1996년의 美발표들의 주종을 이루었다. 이 견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

미하원 아·대소위 증언 참조.

13) 짐 호그랜드(Jim Hoagland), “북한 문턱에 있는 트로이의 목마,” 「워싱턴 포스트」, 1995. 8. 2: A25.

도이치 (John Deutsch) CIA국장, 렉 장군, 1995년 중반까지 국가 정보국에서 동북아를 담당한 에즈라 보겔(Ezra Vogel), 그리고 스탠리 로쓰 등이다. 다른 관리들도 사석에서는 유사한 전망을 하곤 한다.

붕괴를 예견하는 사람들은 또한 북한 지도부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체제위기가 가속화 될수록, 김정일이 궁극적으로 무모한 행동, 곧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페리 국방장관이 북한에 의한 “비합리적 행동”을 경고했을 때 의미하는 바였다. 그리하여 북한지도부에 대한 일종의 “데이빗(David) 파적” 견해가 형성된다. 평양의 “불안정한” 지도자들은, 1993년 데이빗 코레쉬(David Koresh)와 그 분파들이 미정부의 법집행에 직면하여 텍사스 와코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를 불지르고 집단 자살을 감행했던 것을 모방하여, 대규모로 불행한 사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의 붕괴를 예상하고 북한지도부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대북한 신뢰구축 시나리오와 북한 지도부를 개혁정신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현격히 대조된다. 붕괴에 대한 예상이 부상함에 따라, 북한을 중국스타일의 경제개혁에 비교하려는 논의는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담당자들은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있어서 비슷한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식량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포용정책 수행은 북한의 붕괴를 막고, 붕괴가 가까와 옴에 따라 높아질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결이나 압력은 오히려 평양측으로부터의 비합리적 행동을 도발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끝으로, 행정부와 국무성내 영향력있는 의견은 “한국내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북한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와 미국무성간의 긴장은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미행정부와 국무성 관리들은 평양을 다루는 데 있어서 김영삼 정부가 유연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이들 관리들은 남한의 정책수립자들이 국내의 정치적 여론과 선거의 필요에 따라 정책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경직스러우리 만큼 타정부를 배제한 자국의 특권을 고집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관리 중의 몇몇은 1995년 여름에 일어났던 쌀수송 사건과 안승운목사 납치사건도 부분적으로는 한국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관리들은 때때로 북한의 행동이 남한의 공격적 태도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제임스 레이니(James Raney) 주한 미대사는 “남한이 계속해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는 “남한이 북한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듯이 보이는 태도에 북한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¹⁵⁾ 1996년 4월 클린턴 미대통령의 한국방문에 접하여, 뉴욕 타임즈(4월 17일자)는 한국정부가 북한을 다룸에 있어 “보다 미래지향적이 되어 주기 바라는 희망”을 미관리가 피력한 것으로 인용 보도하였다.

14) 붕괴 이론과 미행정부 정책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은 스탠리 로쓰의 1996년 3월 19일 미하원 아태소위원회 증언을 참조.

15) “미대사의 묘한 발언,” 『한국일보』, 1995. 4. 4: 3.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미국의 분석가들도, 명백히 국내적 여론과 선거에 부응하여 정책전환을 거듭하는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들은 1995년 한국의 쌀외교를 그 예로서 인용하고 있다. 당시 한국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련의 대북한 양보를 취했으나, 쌀수송선과 승무원이 북한에 억류된 후 한국내 여론이 대북한 양보에 대해 비판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자 북한에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내의 문제”는 미행정부로 하여금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취하는 데 주저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낳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정기적인 정책조정이 상실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미행정부는 국제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핵확산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정책에 있어 남한의 동의와 실제 협조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아주 최근에, 행정부에 가까운 인사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남북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 시시때때로 협상이 있었긴 하지만 -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워싱턴은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그 배후에 가려진 신념과 가정들을 고찰한 결과, 미행정부는 새롭게 참여화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있

어 포용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의 예상되는 변화 - 붕괴든 개혁이든 - 가 일어날 때까지 위협을 막고 문제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정전체제에 대한 북한의 장래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요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한-미유대를 강화해 나가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확대는 아마도, 보다 큰 규모의 식량 원조 계획 수립, 대북한 경제제재의 대폭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가일층의 노력, 그리고 미사일 협상 지속 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미행정부는 만약 중국이 한반도 4자 평화회담을 공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아마도 그러하리라 예상되는데), 4자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외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¹⁶⁾ 한국측의 제안에 미국이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4자회담을 위한 광범한 국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미국이 기꺼이 전개할 것인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미 취해진 이니셔티브(한국의 4자회담 제의를 의미: 역자주)에 맞서서 형성되는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결정은 그 성격상 남한과 이루어진 이전의 정책조정과는 무관하게 취해질 것이다. 미행정부는 몇몇 선택된 이니셔티브에서 한국의 참가를

16) 중국은 사적으로 4자회담을 지지할지 모르나,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쌍무적이며 비밀스런 것으로 유지해 왔다. 아마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추구할 것이나, 이는 오직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렇게 할 것이다.

포용전략의 확대는 북한의 정책에 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해 포용전략은 지금까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건없는 식량원조와 경제제재 완화는 아마도 김정일과 그 막료들이 현재의 경제적 곤경을 그럭저럭 꾸려 나가고 스탈린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결의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붕괴를 지체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붕괴를 피하기 위해 북한이 한국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이를 설득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미국의 이니셔티브는 너무 도가 약해서 원천적으로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며, 북한 지도자들의 주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붕괴이론은 신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주창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경제상황의 악화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유사사례로서 동구 공산주의체제의 몰락을 드는 것은 북한의 상황과 1980년대 이들 국가들이 처했던 상황간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라크는 아마도 북한과 진정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 걸프전 이후, 워싱턴에는 사담 후세인 체제가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는 예상이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요컨대, 확대된 포용정책에 대한 최선의 전망은 미·북관계의 점진적 진전과 남북관계의 무진전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위협도 동시에 존재한다: 미국이 정전체제를 대치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4자회담 제안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DMZ을 무효화시키려는 대담한 기도를 부채질할 수 있을 것이다. 4월의 침략으로 북한은 이제 결단의 시점에 와 있다. 1994년 4월 이래 지속된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판문점에서의 무장력 침투도 미군 관할 DMZ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DMZ에서의 무장 침투나 군사력을 상주시키려는 시도가 DMZ전반의 안전을 관할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압력에 대해 남한이 미국과는 다른 방식, 곧 무력예의 의존을 포함하는 “반격”으로 대응하고 나올 위협을 깊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DMZ에서의 대남도발(선택적인 총격전 유발 등)이 한-미이간을 촉진시키고 미국에 북한과 장성급 회담을 열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 위협을 감수할지 모른다.

남한 또한 결단의 시점에 임박해 있다: 미국의 새로운 독립적 이니셔티브에 직면하여, 어떻게 더 이상의 외교적 위상의 실추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확대는 한국의 기본적 안보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군사적 이슈를 놓고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미국 선거가 끝나면 높아질 수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한국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한국이 처한 과제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척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가 유연성 없고 일관성 없다고 비난하는 미국내의 비판을 잠재우게 하고, 미행정부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leverage)를 증대시키며, 미의회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의 간단한 전술상의 정책전환이 이것을 달성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곧, 북한과의 회담장소를 결정함에 유연함을 보이되,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도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에 단호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남북대화가 “공식적”이어야 한다거나, 회담이 한반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경회담을 되살리고 그외의 장소에서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약 4자회담 제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을 제외한 3자회담을 재검토하는 등 평화회담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 의제에 관하여, 남한은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어떠한 양보나 이익공여도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대남한 상호행위 - 서울의 의제 상정에 부합하는 - 에 의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하다가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꾸어 엄청난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 한국은 미국의 전략이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한국은 그 결과 한국국민의 여론과 한국정부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동북아 질서하에서의 중·북관계 전망

宋寶賢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副所長

1995년 3월 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제4차회의에서 행한 이 봉총리의 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핵심이다. 본인은 중·북관계에 대해 상세히 논하기 전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¹⁷⁾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다: (1)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2) 한반도 비핵화와 비무장화의 지지 (3) 남북한 간 화해 및 경제교류·협력의 지지 (4)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원 (5) 중·북 및 중·한 경제교류·협력 증진.

중국이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17) 필자는 영문으로 된 원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 표기하였으나, 본문에서는 편의상 ‘북한’으로 표기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7,000만 한민족의 장래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연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현재에도 비무장지대의 양편에서는 1백만에 달하는 남북한 군대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대치하고 있으며, 일단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는 경우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비무장화를 지지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당사자들이 진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1994년 10월에 타결된 북·미간의 합의와 작년 6월과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타결된 경수로 지원관련 합의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었다. 중국은 위에 언급된 합의가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중국은 남북한이 군비축소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경제건설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이는 곧 한민족 공통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은 남북한이 접촉과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관계개선의 기반을 구축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민족화해와 독립, 그리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중·한수교 이후 3년 동안 양국간에는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분야에 있어서의 우호적 관계가 신속히 발전해 왔으며, 작년의 경우 중·한무역규모는 170억달러를 상회하였다. 한국 통산부는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오는 2001년 중·한무역규모는 500억 달러에 이르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는 1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양국이 “호혜와 보완, 그리고 성실한 협조와 공동발전”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한·중간의 경협과 교역은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양국간의 우호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해관통계에 의하면 1995년 중·북 총무역규모는 5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8% 감소한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4억 6,800만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14.5% 증가했으나, 중국의 수입은 6,391만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68%나 감소하였다. 근래에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급속히 증가했다. 북한의 외채상환 능력부족은 북·중교역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지난 8월 북한이 사상 유래없는 대홍수를 겪은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인민폐 3,000만원에 달하는 물자를 북한에 지원했으며, 중국 동북부 지역의 길림성과 요녕성은 일용 생활필수품을 지원했다.

중·북간 전통적 우호관계의 유지와 발전

중국과 북한은 접경국가로서 강과 산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간의 우호관계는 양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은 김정일 정부를 확고하게 지지한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제5기 8차회의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1980년 5월 김정일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서국 비서 및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이전에는 김일성이 관장하던 당·정·군의 일상업무를 다루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1991년 12월 김정일은 북한군 총사령관에 취임했으며, 1992년 4월에는 원수로 승진하였고, 1993년 4월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김정일은 비록 당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에 취임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권력기관인 당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 북한주민과 당·정·군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국가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주저함이 없이 김정일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북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 촉진을 포함하는 선린정책을 추구해 왔다. (2) 중국은 자국의 평화공존5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정부 최고지도자의 선택에 관한 김일성 주석과 조선로동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3) 북한의 정치적 안정,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중국의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중국은

김정일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믿는다. 김정일의 절대권력과 그에 대한 북한사회의 숭배 등 북한의 실정은 현재로서는 김정일 이외의 인물이나 정치세력이 그를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김정일이 금년 하반기에 당과 정부의 최고위직에 취임할 것으로 본다. 만약 이와 같은 예측이 실현된다면, 새로운 환경하에서 전통적인 중·북우호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을 방문할 것이며, 김정일 역시 적당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당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자주적·우호적·평화적 외교정책을 지지한다. 김일성 사망후 지난 2년 동안 자주적·우호적·평화적 대외정책을 견지해 온 북한의 당과 정부는 제3세계와 우호적인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합의 타결 이후 북·미관계가 뚜렷하게 진전되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냉전시대의 잔재인 양국간의 적대적 분위기를 종식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정부 역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북한상황의 “연착륙”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내부혼란을 피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가능한 한 빨리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의 필요성 역시 계속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셋째,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현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993년 12월에 개최된 당 제6기 21차 전체회의에서는 3차7개년계획을 검토하고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 천명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작년 8, 9월의 수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식량 및 부식, 생활필수품, 에너지, 외환 부족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북한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정부는 누차에 걸쳐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조를 요청했으며, 새로이 경제건설에 착수하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해 왔다. 중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특히 한국이 북한의 호소에 호응하여 북한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북한실정에 알맞은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경제개발 전략을 바꾸는 등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존해야 한다. 사실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했으며, 나진, 선봉,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설정했다. 북한은 이 지역을 국제무역중계기지, 가공수출기지, 국제관광단지화 하기 위해 2010년까지의 3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합 26개의 관련법규를 개정 혹은 제정해 왔으며, 동 지역의 사회

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2만명 이상의 농민을 고용하였고, 의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만약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에는 남포와 신의주도 개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정책이 북한경제를 개방하기 위한 시도이며, 북한경제를 세계경제에 접목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좋은 출발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협조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중국은 두만강유역 개발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넷째, 중국은 남북한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민족 공통의 이익추구라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동 노력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한반도는 하나이다. 남북한은 동일한 민족, 동일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1,000만명의 이산가족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이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고 통일국가의 장래를 열 수 있는가는 무엇보다도 한민족 자신에게 달려있다. 주변4강과 국제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내부적 요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관건은 남북한 양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정치적으로 상호적대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상호보완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외교적으로는 상대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부터 상호 협조체제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평화체제로 정전체제를 대체함으로써 상호 대치국면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

한은 접촉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와 협상에 의해 상호간의 차이를 좁히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며, 평화적 통일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의 패권정치와 동서냉전의 산물이다. 관련 강대국들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통일을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양국은 상호 존경과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 비록 현재 또는 미래의 중·북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것이며 결코 양국관계의 주된 흐름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중국과 북한이 향후에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상호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임을 믿는다.

주변 4국과 남북한: 동아시아 안정의 시험대

안 병 준
연세대 교수

I. 한반도: 지역안정의 시험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전략적 위치이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되어 있고 긴장이 잔존해 있는 냉전의 마지막 빙하로 남아 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경우 남북한은 물론이고 4강의 안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의 주된 테마는, 한반도에서 평화, 협력,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정의 시험이며 따라서 4강은 전쟁,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폭력을 수반한 정치변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4강이 단기적으로 북한을 다루고 장기적으로 통일과정에 접근하는 방식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된다는 것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4강들 사이

에 그리고 남북한간에는 물론이고 대내 정치에도 엄청난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력균형과 리더쉽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이같은 전환기는 국제적·대내적 정치에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점 더 갈등과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정확히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래가 한반도, 중국, 동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아무도 남북한과 4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테마를 다듬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소테마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4강은 서로 세력균형을 위한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대체로 평화와 안정을 내세움으로써 “강 건너 불”과 같은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일본의 세력에 대한 완충지로 간주하면서도 휴전협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남한을 자신의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보고 치밀한 협의를 하면서도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강대국으로서 핵비확산에 대한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대북관계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전쟁,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붕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 4강과 남북한 협

력을 요구하는 지역 문제이다. 남한과 4강은 북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해야 하지만, 북한이 남한과 평화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실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같은 점에서 북한 문제는 곧 지역문제이며 강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세제, 한국문제가 지역안정을 해치지 않고 남북한 당사자에 의해 해결되어 통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4강은 남북한간 대화를 촉진하고 현상유지를 넘어서서 관계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지역안정을 위해 다른 강대국들과 공통된 이익을 가지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이같은 과정에 개입하여야 한다.

II. 두개의 한국에 대한 4강의 정책: 평화와 안정 혹은 “강건너 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자신들 사이에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관심이 있다. 또한 한반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이 세력균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다같이 취하고 있다. 이제 냉전은 끝났고 한국분단이 자신들 사이에서 양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까닭에, 한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인적 자원을 포함한 어떠한

자원도 희생시키기를 꺼리고 있다. 이 점에서 4강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며 불이야 불이야 외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강건너 불과 같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강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 관여하는 정도는 지정학과 역사에 따라 다른 만큼 그들의 정책 또한 국가이익에 따라 다르다. 중국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면서 남북한에 대해 균형된 정책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회복하고 잃었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다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남한의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남한과 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북한과는 제네바합의 이행, 긴장완화,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

1. 중국: 북한과 남한 사이의 균형, 정치와 경제의 분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의도는 분명치 않다. 중국은 한반도를 미국, 일본과 양자적 관계에서 봄에 따라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면서 남북한 사이에서 자신의 국가 이익을 저울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는 정치 및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 남한과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름아래 경제를 비롯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세계적 또는 지역적 야심을 가지고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 중국

은, 미국이 1995년 이등휘의 코넬대학교 방문을 허용하고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함으로써 강대국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 모호성”을 시험하기 위해 중국 군부는 1996년 3월 대만해협에서 전쟁놀이를 자행했다.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는 신안보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북경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해석하였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워싱턴은 신 미·일동맹이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6년 4월 25일 강택민 중국 주석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직통전화선을 구축했다고 선언하였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패권주의, 강대국정치”와 “어떠한 형태로든지 타국 내정의 간섭 배제”를 비난하였다. 이같은 용어들이 또 다른 냉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영역에서 미국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가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전형적인 균형정책이다. 정치적으로 북경은 평양과 순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1백만톤의 원유와 50만톤의 식량을 포함한 각종 원조를 통해 김정일체제의 붕괴를 막고 있다. 또한 1961년에 북한과 체결했던 우호조약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북경은 1992년 8월 서울과 국교를 수립한 이래 꾸준히 무역, 투자, 기술이전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한·중간 무역은 170억달러에 이르러, 중국은 한국의 3위

교역국이 되었으며, 남한은 중국의 6위 교역국이 되었다. 남한은 중국의 북동부 지방에 18억달러를 투자하였다. 강택민은 1995년 11월 서울을 방문하여 고화질 TV, 통신, 중형 항공기 및 자동차 등 네 분야에서의 협정을 갱신하였다. 반면, 북한과의 무역량은 감소하여 그 양은 매년 4억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은 한국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측의 제재를 묵인함으로써 평양이 1993년 핵비확산조약에 되돌아 오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평양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중국은 1994년 11월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대표단을 철수하였다. 하지만 1996년 4월 5일부터 3일 동안 북한이 판문점 지역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평화협상을 요구하였을 때, 중국은 정전협정이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바뀔 때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996년 4월 16일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제의한 4자회담에 대해 북경이 분명한 지지도 반대도 표명하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보인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중국의 첫 반응은 “관련 당사국들이 협의를 통해 상이점을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대변인의 말이었다. 북경의 공식적 입장은 관련 당사국들, 즉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등이 다자회담에 앞서 양자적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중국은 다자회담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양자적 관계를 선호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북한이 워싱턴에 대해 군사

및 외교 조치를 취할 때 자신에게 의지할 만큼 가깝지도 않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몰아부칠 이유가 별로 없다. 중국의 이익은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통해 워싱턴이나 동경의 세력이 자신의 국경지역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북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의도와는 반대로 압력을 행사하면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경은 평양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2. 러시아: 북한과의 정상적 관계 회복 및 다자회담 주장

러시아는 대내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1995년 12월 의회 선거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획득한 바 있는 공산당 지도자 주가노프를 눌러야 하는 정치적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옐친은 1996년 4월 크레믈린에서 클린턴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對체첸 전쟁의 종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필요가 있었다. 옐친은 또한 러시아의 NATO가입을 추구한 코지레프 전외무상의 정책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IMF와 서방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하였다. 그가 중국 경제개혁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겠다고 말한 것은 국내 보수파 인사들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노력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복원하고 한국문제와 관련 다자안보회담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러시아는

1990년 9월 서울과 국교를 수립한 이래 북한에 대해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되찾고자 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공언한 직후인 1996년 4월 러시아는 이그나텐코 부총리와 파노프 외무차관이 이끄는 경제과학협력 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였다. 사절단은 평양으로 하여금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삼가하라고 권고하고 소련이 이미 제공했던 80여개의 산업기지의 재가동에 관한 경제협력계획을 제안하였다.

모스크바는 간간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장하여 왔다. 옐친은 중국 방문시 강택민에게 2+4를 제안하였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했다. 4자회담에 끼지 못한 러시아는 자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용 군사력 또는 경제력이 없는 러시아는 한국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3. 일본: 남한과 밀접한 협의관계 유지 및 북한과의 수교 노력

야당 인사인 이치로 오자와의 말대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정상적인 상태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대내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견일치를 유도해내기가 힘든 데다가 자민당이 이끄는 연립여당의 붕괴와 1945년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침체에 놓여 있는 일본은 아·태지역에서 자신의 국제적 역할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마침내 일본은 1996년 4월의 하시모토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안보선언으로 지역안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일본은 군수제공에 동의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군수물자의 부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여타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과 동반자가 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또한 비상시 미군 항공기의 일본 민간공항 및 여타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1978년의 군사협력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하였다. 공동선언은 일본의 인근 특히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요소로 파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본은 혼자서 이같은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자신의 헌법적 제약 때문에 미국에 대해 지지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의 역할분담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시모토 총리는 미·일방위협력을 검토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갖기 위해 헌법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임을 연립정부에 약속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한국과 중국의 일부 인사들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제고의 위협을 우려하는 데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미국과 지역안보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1996년 1월 독도문제로 남한측과 갈등관계에 놓이기는 하였지만 북한과 수교협상을 하기 전에 남한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왔다. 1996년 2월 북경에서 북한측 외교담당자와 비밀접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96년 4월 LAP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타부 암내시악이 이

끄는 특별사절단을 서울에 보내 언제나 사전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북한과의 협상은 정치인이 아니라 외무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남한과 미국이 제기한 4자회담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더욱이 이케다 외상은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기 전에는 수교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일본이 얼마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계획에 착수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미국: 제네바합의 이행, 북한과의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

냉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표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일본 및 남한과의 안보 동반자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개입정책을 수정하려고 함에 따라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1996년 3월 양안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인디펜더스호와 니미츠호를 대만해협에 파견했을 때 자신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클린턴 정부는 일본과의 안보관계를 확인하고 1996년 4월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에 대해 남한과 공조태세를 강화하는 데 힘써으로써 행동으로 입증해주었다.

예를 들어, 1995년 2월에 발간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에서는 “아·태 지역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안보가 우선이며 따라서 이 지

역에의 미군 주둔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은 200여년 동안 일관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평화와 안보, 통상관계, 항해의 자유, 패권 혹은 집단행동 방지 등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서 미국은 남한에 37,000명의 미군을 주둔시켜 또 다른 전쟁을 억제하고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고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를 세계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의 가시적 미래와 중국으로부터의 장기적 도전에 직면하여 클린턴 대통령이 하시모토 총리와의 안보관계를 재정립한 것은 새로운 중요성을 띠었다. 양국간의 결속은 미국이 일본에서 닦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토대를 제공하며,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미국의 이러한 역할이 없다면 중·일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 분명하다. 클린턴에게는 특히 국내선거를 위해 무역제일주의라는 과거의 정책을 버리고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일본과 아시아에 대해 안보제일주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었다.

클린턴대통령이 일본에 가기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1996년 4월 16일 김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매우 적절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정책의 신뢰도는 한반도에서 결정적으로 테스트될 것이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평화협정이 남북한 스스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에 확신시켰다. 북한과 중국이

포함된 4자회담을 클린턴과 김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장한 북한의 요구를 따돌리는 좋은 역외교였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두 대통령은 전쟁 억지에 초점을 맞춰온 한·미 양국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지역동맹으로 발전시켜 가기로 다짐하였다. 이는 건전한 한·미상호군사동맹이 없이는 미·일안보동맹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4년 10월 미국이 제네바에서 북한과 기본합의문을 타결지음에 따라 북한은 핵동결을 유지해 왔지만 남한과의 협상을 거절하고, 대신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추구해 왔다. 그와 같은 협상을 강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북한의 벼랑끝전략에 대한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1996년 10월의 대선 이전에 워싱턴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그러한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긴장이 완화되고 서울과의 신뢰할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쟁실종자나 생존자, 미사일수출, 연락사무소 등의 협상을 넘어선 워싱턴과의 관계개선은 고려할 수 없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사실, 워싱턴은 평양이 서울과 협력하지 않거나 서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평양측에 설득시켜야 한다.

Ⅲ. 지역적 도전으로서의 북한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

북한문제가 지역안보에 심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붕괴의 여러 조짐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문제를 지역적 도전으로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주변4강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안보를 파괴하는 현실로 비화되기 전에 그러한 위협을 봉쇄하고 북한이 연착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붕괴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북한을 돕는 일치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문제를 다루는 것은 강건너의 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이다.

1.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으로서의 북한

전 미국방장관 조셉 나이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지적하였다. 즉 “북한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다. 북한은 핵무기능력의 경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110만명이 무장해 있고 무장병력의 3분의 2가 DMZ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더군다나 신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여기에 물론 생화학무기 능력도 추가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지역안정에 세 종류의 위협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재래전, 핵무기 및 여타 무기 능력, 그리고 혼란스런 붕괴 등이

다. 북한이 자멸을 결심하지 않고서는 남한에 대한 전면전을 도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근 평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보여준 것처럼 군사적인 벼랑끝 행동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주의한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IAEA의 사찰과 미국의 지원하에 영변원자로의 8천개의 핵연료봉의 제거를 시작했지만, 플루토늄과 재처리의 과거기록에 대한 투명한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또한 오사카와 도쿄를 강타할 수 있는 사정거리 600km의 로동1호 미사일을 곧 배치할 것이다. 평양은 최근 재개된 워싱턴과의 협상 결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하게 될지 불확실하며 미사일 수출을 해왔었다면 그것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는 남한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국가들에게도 여러 종류의 예기치 못할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CIA국장 존 도이취는 1996년 2월의 상원 정보위에서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며, 현정권의 붕괴가 평화롭게 이루어질지, 폭력적으로 진행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하였다. 주한미사령관 게리 러크 장군은 다른 의회 소위원회에서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문제는 이 나라가 붕괴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 즉 내부폭발로 붕괴될 것인지 아니면 외부폭발로 이어질 것인지 하는 것이며, 또한 언제 붕괴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북한경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된 듯 보이며 개혁과 개방을 단행하지 않으면 회생될 전망이

거의 없다. 이것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인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리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지 여전히 불분명하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현상태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최초로 북한당국은 그들이 당면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정하였다. 대외경제추진위원회 김정우 부부장은 1996년 4월 워싱턴의 세미나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시장은 이미 붕괴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이종혁 부부장도 1996년 4월 미국무부 관리들과 미의회 의원 및 다른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을 솔직히 시인했으며 추가지원과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를 간청했다.

2. 북한의 선택: 대결, 붕괴, 그리고 연착륙

북한은 세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 즉 대결 혹은 붕괴 아니면 “연착륙”이 그것이다. 남한과 대결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존립을 보장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일 워싱턴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그것은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시켜 온 억제와 휴전상태를 깨뜨릴 것이며, 미국의 우방인 한국의 주권과 정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서울의 참여없이 평양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거절해온 이

유이다. 서울과 워싱턴은 대결전술을 지속시킴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에 썩기를 박으려는 평양의 의도를 허용치 않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이 연착륙을 하는 것은 한국과 주변4강의 이해관계에도 부합된다. 미국만으로는 그러한 결과를 성공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더라도 북한은 남한과의 평화와 협력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남북한간의 간접교역량은 1995년에 2억7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북한 총무역량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남한이 북한의 3번째 무역상대국임을 보여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 무역과 투자와 기술을 제공할 나라는 남한 이외에는 없다.

3. 북한의 조건부 개입

한국과 미국, 일본 및 관련 당사자는 경제적, 국제적 협력에 북한을 개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평화를 유지하며 한국과 의미있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참여정책을 추진하되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을 봉쇄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통일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부담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다른 주변 강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안정을 위해서 부담과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문제는 강건너의 불이 아

나라 이제 발등에 떨어진 “명백하도고 현존하는” 불이기 때문이다.

IV. 현상유지를 넘어 지역안정을 위한 남북정상화의 지원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변4강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현상유지를 넘어선 지역안정을 위해 남북간의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의 전략적, 경제적 중심로 전환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만일 주변열강이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남북대화를 지원해야 하며 한국의 통일을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안정을 구축하는 과정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중국은 특히 이 과정에 깊이 개입해야 하며 공동의 선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진정으로 수행해야 한다.

주변4국과 남북한의 양자적 관계에서 초래되는 느슨한 세력균형 속에서,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의 연대는 북한문제에 대한 공통의 안보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편리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한가지 점, 즉 이 지역 전체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진심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현상

유지를 넘어서 깨지기 쉬운 평화를 보다 확고한 상태로 만들고 통일을 질서있게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궁극적 수단으로서의 남북대화

남북한이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대화와 정상화가 없이는 어떠한 해결책이 강구될 수 없다. 다른 국가들은 남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직접 대화와 협상이 없이는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와 안정도 성취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주변4국이 원론적 차원에서 언술적 승인의 수준을 넘어서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4자회담 혹은 2+2, 4-2, 2+4 등의 여러 회담방식은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한 회담은 평화와 협력, 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남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상해야 하며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 목적을 관리해나가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변강국들은 남북한이 평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스스로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평화와 협력 및 화해의 과정으로서의 통일

통일을 대화를 통해 평화와 협력, 화해를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과 독일, 예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일은 계획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온다면 갑작스럽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만약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면 통일은 상호동의를 의해서가 아니면 흡수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방지하는 책임은 주변4국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관련당사국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비상책과 그 과정에 수반되는 필요한 위기관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긴요한 것은 북한의 식량위기를 어떻게 공동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문제는 단지 1995년의 심각한 수해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으로부터 야기된 장기적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좋은 삶든 간에 국제사회의 지원과 함께 남한이 북한을 먹여살려야 하는 때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주변강국은 북한의 식량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적 개입은 연착륙과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와 협력을 위해 남한과 진정으로 협상하려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군사적 벼랑끝전략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한·미의 연합억지력을 강화하여 봉쇄해야 하며 다른 주변국들은 지역안정을 위해 이러한 평화유지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4자회담에 북한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한국은 최근 세 기업체의 북한내 투자를 승인하였다. 서울은 나진·선봉에 700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한 삼성전자와 남포에 640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한 대우전자, 그리고 급수시설의 개발을 위해 금강산 근교에 580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한 태창의 사업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행동은 한국정부가 1994년 11월 북한내 투자규모를 5백만 달러로 제한했던 규제를 철회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5년 남한의 쌀 10만톤의 무상원조시 북한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남한국민들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을 감안한다면, 남한이 경제교류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양자간 및 다자간 접근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정상화를 촉진시켰던 KEDO의 경우처럼 한국이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3. 지원자 및 보장자로서의 4강

평화와 협력, 화해를 위한 주변4국의 역할은 그것들을 지원하고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

국의 이해 및 지역안정과 합치된다. 만약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서 한국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면, 남북한의 직접대화나 협상의 전망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

4자회담 제안은 또한 남북한이 평화와 협력을 논의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협상의 지원자 및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상황에 따라 향후 이러한 역할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은 특히 북한과의 유일한 협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남북한 스스로 평화와 협력,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는 역내 다른 참여자 및 국제조직을 모색해야 한다.

4. 중국의 적극적 개입

비록 베이징은 자신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베이징이 평양과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상당한 원유와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는 한, 1995년 평양에 쌀 1백만톤의 무상원조를 제공했고 1996년 2십만톤의 쌀을 추가지원할 것이라는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원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중국의 참여와 적극적 역할은 평화와 통일을 지원하고 보장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이다. 일부 한국사람들은 통일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권하에 놓이게 되고 한국의 투자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전략적 인사들은 통일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통일한국이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에 손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일경쟁과 중·미경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역시 중국은 21세기에 한국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력에 균형을 유지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베이징은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과의 양자관계에 대한 보조적인 변수로 취급하지 말고 대국과의 경쟁과는 독립적으로 한반도가 자신의 안전과 경제적 이해에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또다른 전쟁이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생산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북한정권의 유혈붕괴를 방지하는 것은 베이징의 이해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근거에서 한국과 주변강국은 중국이 평화와 통일과정에 깊이 참여하여 중국이 방해하지 않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자체가 동아시아에서 느슨한 세력균형을 방해하지 않고 세력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한국,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간의 군사 대군사회담은 투명성과 여타 신뢰구축 수단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군이 한국의 평화와 통일과정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가질 때에야 비로소 중국군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지원하려 할 것이다.

제2회의 토론

사회자: 김달중 (연세대 교수)
토론자: 유세희 (한양대 교수)
 김유남 (단국대 교수)
 전인영 (서울대 교수)

김달중: 이 세 분은 이 분야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전문가들이십니다. 이 세 분의 토론을 차례로 듣고 이 분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주제 발표자들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 전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리 생각을 정리해주셔서 토론에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유박사님부터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세희: 오전 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혹시 토론내용이 오전내용과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宋寶賢선생께서 매우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장소에서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4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관계 내지 주변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로

4자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문은 주로 宋寶賢선생의 논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었지만, 宋선생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4자회담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면서 다른 두 분에 대한 것도 언급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오늘 宋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을 보면 우선 주신 논문과 약간의 톤이 달라서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학자로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宋선생 말씀중에서 4자회담을 중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본 듯한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전망이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분명히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중국으로서 4자회담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宋선생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대체로 Nixsch선생은 북한이 찬성하면 중국도 찬성할 것이고 북한이 반대하면 중국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하셨는데 저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Nixsch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제주선언이 한국이 주도를 하고, 안선생이 말한 것처럼 평화문제에 관한 한 남북한간에 해결을 하고 미국은 평화문제에 관한 한 관여를 하지 않고 다른 문제에 관해서만 북한과 협상한다고 할 때 과연 북한이 이에 응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북한이 4자회담을 통해 얻을 것과 잃을 것이 있습니다. 북한

이 4자회담에 찬성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이점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 경우 남한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자제해줄 것을 바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대북관계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4자회담에 응할 경우 남한과의 관계개선으로 인해 경제교류 등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김일성의 탈상후 김정일의 공식승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 호전적이고 고립적인 북한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4자회담에 응하게 되면 그동안 한반도문제에 관해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협상하겠다는 주장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북한은 아직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4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북한이 4자회담에 반대하더라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Niksch선생은 이것에 대해 engagement policy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의, 4자회담을 반대하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들의 반발을 우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4자회담에 찬성할 이유도 있지만 반대할 이유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4자회담에 응해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하나 설령 4자회담에 응해오더라도 4자회담에서 성과를 얻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남북한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놓고도 백지화해 놓은 상태이고 심지어 정전체제도 일방적으로 폐기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4자회담에 설령 응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북한이 비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자회담이 또다른 기본합의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일부 비판적인 시각과 러시아의 주장은, 4자회담을 통해 북·미간의 접촉만을 정당화시켜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宋寶賢선생에게 드릴 질문은 만일에 북한이 4자회담보다는 북·미 양자회담을 바라고 있으므로 3자회담을 하기로 하고 중국이 빠져주기를 바랐을 때 이에 중국이 응할 의사가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남한으로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북·미 양자회담이 되고 남한은 보조역할만을 하는 지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며, 이에 대해서 Niksch선생과 안병준선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하나 宋선생의 논문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宋선생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북한의 대외정책이 상당히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병준선생의 논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북한의 대외정책이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매우 호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宋선생은 여전히 북한이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믿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인데,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그것은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남북한 관계는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의 반응은 오히려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중국이 정말로 의사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 식량원조, 기름원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책을 지지해주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북한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원치 않으며 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주지 않는 한 북한은 계속해서 소위 '벼랑끝 외교'를 하게 됩니다. 과거의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어떤 제재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강경책을 쓰도록 부채질 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남한을 한반도 문제해결에 북한과 마찬가지로 직접 당사자로 보고 직접 당사자 간의 협상이 남북한 문제해결에 관건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북한이 평화문제 구축에 있어서 계속해서 남한을 배제하는 동안 아마 평화는 힘들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 중요한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번째로 말씀해주실 김유남 박사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까.

김유남: 우선 Niksch박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Niksch박사의 논문 내용중 표현에 있어서 모호한 점으로 인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한국적인 이슈에 대한 미국의 강조’라는 부제하의 5째줄 부분인데 “미행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이니셔티브를 취하였다”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북한이 잠재적인 핵수출국이 되지 않도록”으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두가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로고프 소장이 불참하셔서 러시아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저는 미국과 러시아 즉 당시 소련의 제3세계에 관계된 연구를 해온 학자로서, 지금도 러시아가 한반도를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4자 회담제외에 즈음하여 러시아 입장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문에서의 얘기가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 러시아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국내신문에서 러시아의 평양방문 사절단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과장하면서 센세이셔널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언론이 한발 먼저 나가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러시아가 지금 4자회담에 빠진 분풀이로

북한을 갖고 장난치는 것으로 보고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오는 6월 16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엘친이 재선되지 않고 기타의 후보 특히 공산당이나 기타 야당연합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한반도나 중국문제, 일본문제 등 극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평화정책과 안보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일 제가 워싱턴에서 러시아 선거를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돈이 들더라도 엘친을 도와서 그가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4강의 구도속에서 러시아의 국내정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파장이 상당히 큼니다. 그러므로 러시아 국민들이 이성적인 투표를 통해 개혁주도세력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외부에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주어서 러시아로 하여금 계속 개혁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에 대한 평은 국내 신문이나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 Nicksch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이 처한 과제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척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외교가 유연성 없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미국내의 비판을 잠재우게 하고, 미 행정부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leverage)를 증대시키며, 미의회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끌어내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언급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가 느끼기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중국도 남북한은 자기 능력과 의지로서 협상할 수 없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반성해야 하고 우리가 4자회담에 임하는 뜻도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남북한은 타협할 수 없는 두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탈냉전시대 이후에 유일하게 부상한, 책임질 수 있는 중개자로서 또는 리더십을 취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한반도문제 역시 미국이 리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ixsch 말대로 미국은 한국문제나 남북한의 정치적인 문제, 즉 intra-Korea, inter-Korea 문제보다는, 한반도에서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것, 즉 글로벌(global)한 시각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보고 있으며, 때문에 남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관심을 쏟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 역시 Nixsch와 뜻을 같이하면서 미국 지식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기피인물 관계, 전혀 협상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누가 개입해야 한다, 다자화해야 한다, 한반도는 한국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지만 이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자회담을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4자회담에 들어가 있지 않는 러시아는 한반도와 16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북한과 이념적 인연을 맺었고 이미 북한과는 50여년의 전통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런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빼놓고 한반도 4자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가치관과 정치제도에 의해서 남한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1950년 남침했을 때 미국은 5만명이 넘는 젊은 생명을 여기다 버리면서 나라를 막아주고 10만 이상의 군인이 부상당하고 실종되면서 그당시 50년대의 미화가치로 50억 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 미국이 한반도에 특권을 갖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같은 차원에서, 자원병을 보냈다고 하지만 북한에 35만의 인명을 버린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년에 100만 톤의 쌀을 주었기 때문에 북한과는 특수관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반도에는 미국의 특권과 중국의 특권, 러시아의 특권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4자회담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Nixsch선생께 한가지 질문을 하고 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6자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콤비네이션(combination)을 보면, 매트릭스(matrix)상으로 15개의 2자회담이 가능합니다. 20개의 3자회담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2자회담,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2자회담, 남북한이 빠지는 2자회담, 남북한이 동시에 들어가는 3자회담, 남한만 들어가는 3자회담, 북한만 들어가는 3자회담, 이런 콤비네이션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4자회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Niksch선생이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적 시각에서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전인영 교수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영: 감사합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이미 많은 질문과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간단하게 질문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Niksch선생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북한개방유도정책, 이것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주회담에서 평화문제는 남북한이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평화문제에서 미국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것이 저에게 궁금한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했다면 4자회담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화문제에 과연 미국이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결국은 제의는 제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은 추진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상충될 때, 과연 미국이 한국의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이미 소련과의 엄청난 문제를 해결한 미국이 북한 문제정도를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북한이

쉽게 응해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마지막 질문은 만약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다가 한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면 그 대가를 어느 정도로 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들어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宋부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유세희교수님과 비슷합니다. 만일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가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4자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면 중국은 그래도 좋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해 안되는 표현의 모호성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되도 좋고 안되도 좋다는 그러한 것이 중국의 정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소극적일 때 또는 힘들 때 이니셔티브를 취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여러가지로 특수한 대북관계 때문에 그러한 지렛대(leverage)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문제 때문에 그러한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인가 또는 그럴 의사가 조금은 있는 것인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준교수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회담에서 나온 결과가 어느 정도는 미국의 이니셔티브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미국식의 절충안과 같은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한국측의 이니셔티브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측

상황이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실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다면 포기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능력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상당한 한국의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안교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대응해야 하겠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나름의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협력문제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좀더 뛰어넘어서, 미국이나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가기 전에 또한 일본이 또 two-track으로 나가기 전에 또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인지 또는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고견이 있으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제 지정토론자들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먼저 주제발표하신 세 분으로부터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이번에는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는데 질문을 제일 적게 받은 안박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영 선생의 질문 뿐만 아니고 지정토론자들께서 얘기하신 것을 들으시면서 생각나시

는 것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병준: 먼저 응답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질문은 유세희 교수가 만약에 4자회담이 성사되지 않고 미국, 북한, 한국 사이에 3자회담이 될 때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 한국은 또다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의 관찰자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확고한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는 이미 클린턴 대통령이 4월 16일 기자회견에서 평화문제는 한국민들이 해결할 문제이고 이것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 따라서 전쟁과 평화에 관해서는 한국이 관찰자가 아니라 정말 당사자라고 하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한 관계나 평화문제를 관리하는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하고 또 이 합의를 우리가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미간에 사전합의를 하고 우리 정부측에서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대미외교를 아주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무자들이 여기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미외교라든지, 대언론외교라든지, 대학계외교라든지 이런 총체적 외교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전인영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답변하겠습니다. 제주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한 것 같다고

했는데 제 느낌은 이 4자회담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좋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제생각은 이 기회가 우리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직접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4자회담이 마치 지상명령인 것처럼 지금 많이들 논의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두 나라가 이러한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외교역량을 키워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과정과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containment가 아닌 engagement라고 한다면 그 테스트도 역시 한반도에서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 유세희, 전인영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태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national agenda는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며 통일 또는 북한변화에 대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좋은 삶든 우리
가 북한을 먹여살려야 되고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켜야만 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
으로 중장기 계획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또 민간부문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 북한에 제안하
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Niksch선생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와 평화를 협상하고 남북대화에
긍정적으로 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을 도울 수 있고 북
한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
화해의 입장에서 우리와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고 나아가서 신
뢰구축 조치를 할 수 있게 준비해두고 이것을 하나의 national
agenda로 조용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런데 4자회담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
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4자회담의 이론적 근거
가 주로 휴전협정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4자를 얘기하는 것입니
다. 1974년과 1975년의 제29차, 제30차 유엔총회였을 때 그리고
미국의 닉슨, 포드 행정부 때, 그당시 북한과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UNC 해체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UNC가 해체
될 상황에서는 휴전협정 자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기
존 휴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휴전협
정당사자 4개국 회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제안된 4자회담은 74년, 75년에 적극적으로 한·미 정부에 의해
서 제안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
이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박사께서 “4-1” 즉 4에서 중국이 빠지고 3자회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자회담에 대해 한국에서는 “4-2”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4에서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이 빠지고 남북한간에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박사님,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안병준: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부의 구상은 “4-2”입니다. 정부의 구상을 보면 1차적으로는 미국, 중국, 한국, 북한 4자가 만나고 내용에 들어가면 실질적 평화협상은 남북 당사자가 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세희교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4자회담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종래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 테두리내에서 북한은 의제로서 미국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구상대로 그것이 아니라 남북 당사자간의 평화협정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4-2”가 될지 또 “4-1”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유남교수가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숫자놀음이 있는데 저는 숫자놀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협상하자는 북한의 입장과 우리가 중시하는 남북 당사자간의 원칙간에 어떤 합일점, 어떤 화해점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4자회담의 장래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남: 저의 가설에 의하면 한국전 이후 지금까지의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패턴을 봐서 남북한 당사자는 협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4-2'라는 가설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시 일반토론 때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Niksch선생께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iksch: 4자회담과 관련하여 몇가지 코멘트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남한이 4자회담을 제안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작년의 경우 미군사령부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정부가 정전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조치를 취했을 수 있습니다. 95년 3월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이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인은 정전협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미국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기도에 대하여 심도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보다 강경한 행동을 앞으로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95년 5월 3일 공동경비구역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내에 이 문제를 검토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으로부터 2+2 형식의 아이디어가 나

왔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 의견을 작년 7월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조심스러운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 이슈를 작년 8.15 광복절 때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주도 4자회담은 작년 2+2회담의 아이디어가 약간 수정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이 3자회담이 아닌 4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한중관계를 고려해서 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은 장기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즉 이 제안에 중국이 포함된 것은 본래 한국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한 것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주도권을 잡기 보다는 한국정부에게 이니시어티브를 취하라는 언질을 준 것 같습니다. 미국무성은 한국의 관리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은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에 관한 남북회담을 지지하며, 미국은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본인은 들었습니다. 당시 미 국무성은 만약 남한이 북한을 남북간 회담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이를 지지하며, 동시에 한국이 제안하는 보다 광범위한 제의에 대해서도 지원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 국무성이 한국에 보낸 메시지를 토대로 4자회담을 준비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들 세 가지 이유가 한국정부가 4자회담을 제안한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세희 교수님께서 4자회담이 진행될 경우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것은 앞으로 4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정도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4자회담

에서 다루어질 의제의 내용에 따라 미·일 양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맺는 정도가 제한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외에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잃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국정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은 회담장소에 대한 유연성, 협상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량문제를 비롯한 경제문제에 관하여 북한과의 직접외교를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경제문제를 포함하는 대북의제를 설정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교수께서 미국과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정전협정과 평화문제에 관해 북한과는 쌍무접촉을 갖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가지 골치아픈 문제는 판문점에서의 미·북군사접촉 문제입니다. 미군사령부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슈가 다루어질 수 있다면 대북한 군사접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전협정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미군이 정전체제를 벗어나 북한과의 직접회담을 갖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북한이 좀더 큰 범위에서 의제를 다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에 의한 의제 범위의 확대는 미국에게 이 의제들을 다루도록 압력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런 식의 군사접촉이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의 군사접촉이 가치가 있는지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입니다.

김교수님께서 러시아 선거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한 코멘트를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지 않고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서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6월의 러시아 대선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생각의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수님께서서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와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이 양국간 의견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의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상호 의견차이에 있어 각자의 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인식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있어 남한도 북한만큼 책임이 있다, 즉 남북이 동일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미국은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facts)들은 이러한 미행정부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제 논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유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만이 한반도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배타적인 태도에서 후퇴하여야 합니다. 한국만이 할 수 있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럼으로써 양국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많은 의견교환이 필요하고 협상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여야 합니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매우 확고합니다. 이런 북한의 협상전략에 대해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국이 공동의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과의 후속 회담, 후속 외교를 위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불확실

하더라도 가능성을 보고 회담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리 의제를 설정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전제되면 양국간의 마찰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宋寶賢선생께서 말씀해주시죠.

宋寶賢: 제 논문에 대한 많은 의견과 코멘트에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질문이 4자회담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본인은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면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및 남한과는 직접 토론을 할 수 없었으나 4자회담에 참석하게 되면 미국 및 남한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미·일·남한이 만약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해온다면 어떻게 4자회담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토론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과연 미국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국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저의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사람들에게서 인상깊은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관한 평가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두 개의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매우 제한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북한은 4자회담에 중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요하

고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남한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과연 남한이 중국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는 4자회담에 관하여 갑자기 많이 들을수록 4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혼란이 일어남을 느낍니다. 4-1회담이 될 것인가 4-2회담이 될 것인가,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회담에 대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 남한, 중국, 일본 및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뚜렷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대답을 늦추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정치적 생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중국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중국의 합리적 외교정책은 관련 당국자간의 선의의 건전한 대화를 통하여 많은 조정·협의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이제 각국이 이해관계와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잘 조화시켜서 건설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런 입장에서 건설적이고 성공적인 4자회담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글썄요, 본인은 3자회담이라 하면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4자회담에서 가졌던 현재의 생각에서 후퇴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자제하겠습니다. 남한의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고 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남한은 한반도 긴장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그리고 4자회담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학자들이 잘 연구만 한다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그럼 전체 회의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김유남 박사께 부탁하고 싶어요. 아까 Niksch선생께서 북한이 4자회담제외에 대해서 다소 유보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고 태도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김유남 박사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셨는데 김박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유남: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지금 4자회담에 대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을 탐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4자회담문제가 제기되기 전후하여 북한이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은, 유관자이면서 4자회담에 들어가지 않은 러시아와 일본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또 러시아의 선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유일하게 동방에 남아있는 유사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공산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경우, 북한식 사회주

의의 생존이 이론과 현실에 맞게 되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Niksch선생이 논문의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점을 칠 때에 이른바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냐 비착륙이냐 하는 세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3자회담, 4자회담으로 북한을 대할 때에는 경착륙을 못하게 도와줌으로써 우선은 비착륙을 시도하게 하려는 것이고 연착륙은 나중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체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향수: 유향수입니다. 오늘 오전보다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회의는 4자회담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4자회담의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4자회담이 남북한관계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4자회담의 전제조건입니다. 전제조건은 대한민국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과 같은 베이스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대한민국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4자회담을 수락하는 것은 종전의 그러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실제로 인정한 연후에 이 4자회담에 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4자회담을 위해 대한민국을 인정한다면 김일성의 모든 교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기에선가는 김정일이 자기 리더십을 확립하려 할 것이고 만일 4자회담이 성사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일성의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까지의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계층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Niksch는 우리에게 유연성이 부족하고 비밀관적이라고 하였고 이북에게 변화를 줄 기회를 준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몇분의 말씀을 다 듣고 발표자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히 얘기합시다.

김성한: 남북통일 국민연합에서 왔습니다. 저는 4자회담과 관련해서 휴전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전 당시 남한은 당사자를 내세우지 않고 북한은 유엔과 협상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서 있습니다. 당사자 회담은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회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백상창 박사님 말씀하시지요.

백상창: 오늘의 주제는 주변4강의 대한반도정책인데 주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루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통일의 경우에 저는 정신분석학자로서 남한의 건강한 정신으로 북한의 건강하지 않는 정신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 미국, 러시아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완충작용을 할 것입니다. 21세기에 닥쳐올 문제인 동서양의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호: 전에멘대사를 지낸 유지호입니다.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 宋선생과 Nixsch가 대립되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런 대립적인 견해는 한국사회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붕괴에 대해 체제의 붕괴와 정권의 붕괴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자께 묻고 싶습니다. 안교수님께 드릴 질문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4자회담이 남북한의 평화구축을 촉진하는 데 끝나야지 다른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극동지역에서의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는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집단지역안보체제의 틀을 먼저 형성하는 것이 4자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정선: 연세대의 노정선입니다. 저는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심리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게 4자회담보다는 식량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단계적으로 4자회담에 옹할 것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인영: 노정선선생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십년 동안 해 왔어도 성과가 없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쌀지원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며 북한이 이렇게 어려울 때 외면하면 앞으로의 관계개선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통일도 서독의 경제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수로에는 그렇게 큰 지원을 하면서 북한주민에게 직접 적 도움이 되는 쌀지원을 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세희: 저는 남북한 당사자 중심의 통일 추진가능성과 당위 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자회담이 갖는 약점, 부작용은,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다고 해서 이에 4자회담을 통해 대응하려 하다가 자칫 주변국가를 끌어들이는 좋지않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한의 지위를 격하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 이들 국가의 간섭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중국이 남북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것을 주장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량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식량지원 문제는 남한내부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국내정치도 하나의 현실이므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도 선거 등 국내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다시 대북지원정책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 양보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등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식량원조와 관련해서 저는 미국과 나토 국가간 논쟁이 생각납니다. 그때 미국의 입장은 배고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답변했었습니다. 식량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남: 백상창박사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남북한 당사자간의 한반도문제를 한민족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은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한관계는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권력투쟁관계의 문제입니다. 통일은 민족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의 패배로 되는 것입니다.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데 끝나야지 통일에까지 연결되면 안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노교수님말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식량문제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져야지 정부차원에서 유인책을 위해서 식량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서기 어려우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정토론자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고 이제 주제발표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宋寶賢 선생에 대해서는 전체토론에서 질문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자회담은 다자간협상과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대화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이유를 북한의 입장을 중심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은 마찬가지로 분단국의 입장에 있으며 대만, 홍콩의 문제는 국내문제이니 이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왔는데 만일 한반도문제에 중국이 나서게 되면 바로 중국자신의 문제에도 연관이 되게 되고 그 입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문제에 적극적 입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준비가 되신 Niksch선생께서 먼저 말씀 해주셔도 좋습니다.

Niksch: 유대사님의 질문에 대해 먼저 답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한국의 유연성 있는 협상방식이 일관성 있는 북한의 협상방식을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협상스타일이 매우 일관성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어떤 문제에 관하여 어떤

상대와 협상을 하건 북한은 일정한 전술적 틀(standard set of tactics)을 갖고 응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외교와 협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하나의 독트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독트린은 매우 일관성 있게 전술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핵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일관성있게 일정한 패턴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나중에는 이를 약간 수정하는 방법도 그러한 패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NPT를 탈퇴하겠다는 것을 수정함으로써 미국이나 한국이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함에 있어 많은 좌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한다고 해놓고서 이어 탈퇴를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또 북한은 영변원자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IAEA 규정을 위반하다가 주변 당사국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지속적으로 ‘포기’와 ‘수정’을 반복하는 전술적 유연성(tactical flexibility)의 외교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북한에게 있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곧 우리에게도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은 한국이 4자회담에서 배제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직접 다룰 것인지에 관해서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KEDO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남한이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것이 미국의 의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성격상 한국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협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문제와 휴전선에 배치된 병력의

후진배치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이 문제를 협상할 수 있고 미국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휴전선 남쪽은 대부분 한국군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잘 알려진 문제로 정치·외교·경제분야에 있어서의 남북간의 관계정상화입니다. 이는 어떠한 형태의 평화협정과도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성격상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이 협상할 길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붕괴다 연착륙이다 하는 말들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유행어처럼 되고 있습니다.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한 저의 생각은 회의적입니다. 북한의 체제가 동구(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등)와 달리 단기에 붕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붕괴와 같은 체제상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정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정권을 대체할 군부내의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어 집단지도체제나 김정일가계내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가 매우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권붕괴나 체제상의 붕괴와 같은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 인민들의 대중운동에 의해 체제가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동독이나 루마니아와는 달리 북한이 외부와 정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민봉기가 성공하려면 외부와의 정보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하는가 또 이 식량

지원이 북한을 4자회담에 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또 한번의 무조건적 식량지원이 4자회담에 관한 북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93년 2월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미국관리가 말하기를 한국정부가 이 인모를 석방하여 북한에 보내주기만 한다면 북한은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해 4월인가요? 한국은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인모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해서 북한에 혜택을 주고 양보를 하면서도 아무런 실질적인 호혜적 반응(reciprocal response)을 얻어내지 못한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합니다. 일방적으로 식량을 보내는 대신 왜 한국이 일괄적인 제안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북한은 일괄타결(package deal)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한국이 대규모의 식량지원과 기술지원계획을 제시하되 그 상응조치로 북한 내부의 개혁 특히 농업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장기적으로 북한인민을 먹여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호혜에 의한 접근방법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에게도 유익하고 남한에게도 유익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식량을 제공하는 것보다도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宋賣賢: 사회자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주최측에서 저를 초빙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학자 여러분께도 진솔한 대화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전만은 못하지만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길 기대합니다. 이는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안보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유지 그리고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은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한 노력이 바로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옳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논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는 남북한 양측의 한민족 모두가 통일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중국은 같은 분단국가로서 한민족의 통일열망을 잘 이해합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새로 수립될 수 있는 평화협정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학자들이 지적하기를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4자 회담에 중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안병준교수께서 말씀해주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준: 아까 김성한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남한이 휴전회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과 회담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네바회담때 북한이 남북당사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한이 거부하는 것은 남한이 조약상 당사자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회담을 할 경우의 여러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유지호 대사님의 말씀중 4자회담을 할 경우 중국과 미국이 남북한간에 평화를 촉진하는 것 이상으로 관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이상으로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4자회담시 한·미간에 회의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세심한 합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호 대사께서 동북아시아에 다자간 안보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한승주 당시 외무부장관이 이것을 ARF에서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는 중국이 호응하지 않고 북한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좋습니다만, 중국이 호응하지 않는 한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남북한간에 지원을 비롯한 모든 협상은 평화, 화해,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룬다는 목적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힘으로 실현가능한 제안을 해야지 실현할 수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셋

제로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도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국민들의 지지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자회담을 할 때는 이른바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과 합의할 때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4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정토론자, 주제발표자께서 마지막으로 해 주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랜시간 참여해주시고 좋은 평가와 질문을 해주신 분들과 무엇보다도 좋은 논문을 발표해주신 세분 선생, 좋은 토론을 해주신 세분 토론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후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附錄: 會議概要>

會 議 日 程

5月 17日(金)

- 09:00~09:30 등 록
 개회식
- 09:30~09:35 개회사: 이병용(민족통일연구원 원장)
- 09:35~09:50 기조연설: 권오기(통일부총리)
 “한반도 평화정착과 주변4국의 역할”

第 1 會 議

09:50~12:00

- 사 회: 이상우(서강대 교수)
- 발 표: William Clark, Jr.(Japan Society 회장)
 “동북아정세 변화와 미·한 안보협력 방안”

永井愼也,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소장대행)
“최근의 북한정세와 일·북관계”

- 토 론: 윤정석(중앙대 교수)
문정인(연세대 교수)
박영규(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

午 餐

12:30~14:00

第 2 會議

14:00~15:30

- 사 회: 김달중(연세대 교수)
- 발 표: Larry A. Niksch(CRS 연구원)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宋寶賢(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副所長)

“신동북아 질서하에서의 중·북관계 전망”

안병준(연세대 교수)

“주변4국과 남북한: 동아시아 안정의 시험대

- 토 론: 유세희(한양대 교수)
김유남(단국대 교수)
전인영(서울대 교수)

휴 식

15:30~15:50

第 2 會議 討論

15:50~18:00

參加者 名單

- 基調演說

권오기(통일부총리)

- 司會者

이상우(서강대 교수)

김달중(연세대 교수)

- 發表者

William Clark, Jr.(Japan Society 회장)

永井愼也(일본국제문제연구소 소장대행)

Larry A. Niksch(CRS 연구원)

宋寶賢(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副所長)

안병준(연세대 교수)

- 討論者

윤정석(중앙대 교수)

문정인(연세대 교수)

박영규(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

유세희(한양대 교수)

김유남(단국대 교수)

전인영(서울대 교수)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關稅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화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分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軍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중심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 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 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 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세미나시리즈 96-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2-4725, FAX : 238-329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6년 5월 일

發行日 1996년 5월 일
